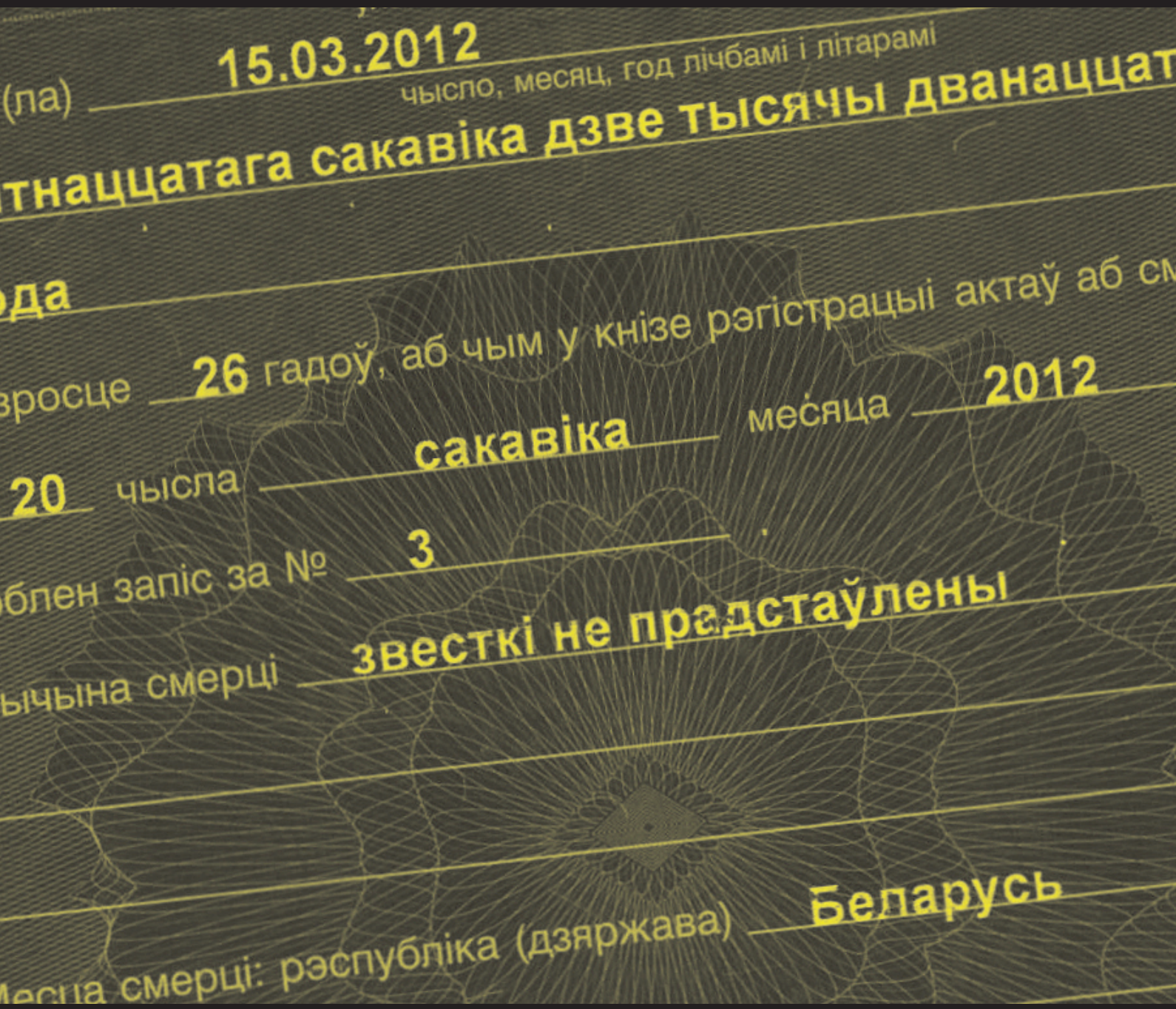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2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0개국 300만 명 회원과 지지자 활동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First published in 2013 by
Amnesty International Ltd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 Amnesty International 201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0-620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amnesty.or.kr

문서번호: ACT 50/001/2013
원문 언어: 영어

2013년 4월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번역 출간

이 보고서의 모든 저작권은 국제앰네스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옹호, 캠페인 혹은 교육 목적에 한해 무료로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영향력 평가를 위해 저작권자에게 고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이외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복제, 다른 출판물에서의 재사용, 번역 및 각색할 경우에는 사전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때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표지 및 뒷면 사진:
벨라루스에서 3월 20일 발행된 사망확인서. 이 확인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26세 남성이 사망했고, 사인은 "정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남성은 총살당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or.kr

목차

서문 3

2012 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 5

전세계 현황 7

지역별 현황 10

미주 지역 10

아시아-태평양 지역 14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22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2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33

부록 I: 2012 년 보고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40

2012 보고된 사형집행 현황 40

2012 년 보고된 사형선고 현황 41

부록 II: 2012. 12. 31 현재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현황 42

부록 III: 2012 년 12 월 현재 사형제도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 현황 44

부록 IV: 2012. 12. 20 채택된 유엔총회 67/176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46

미주 48

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2012 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법제도 내에서 사형제도가 운영된 상황을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입수 가능한 정보 중 가장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운용에 대한 통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는 정부 공식 집계를 포함해 사형 선고를 받은 개인과 그 가족 및 변호인, 기타 시민사회단체 보고,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소식통을 통해 수집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수치만을 발표한다.

일부 국가는 정부가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사형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경우 더욱 악화되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만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2009 년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추정치 발표를 중단했다. 중국은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밀로 다루는 지역이다. 신뢰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의 사형제도 운용의 확실한 최소치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입수 가능한 정보를 보면 중국이 다른 세계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이 명백히 나타난다.

본 보고서의 세계 통계 수치는 최소치를 나타내는데, 즉 사형집행이나 사형선고, 사형수 등의 수치는 더욱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형을 집행하거나 선고한 국가 수 또한 더욱 많을 수 있다. 본 보고서 발표 후 국제앰네스티가 새롭게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가능한 경우, 온라인(www.amnesty.org/deathpenalty)에 통계 수치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예멘 (28+)의 경우와 같이 국가 명 뒤 숫자에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최소치임을 나타낸다. 아프가니스탄의 사형선고 건수 (+)와 같이 국가 명 뒤에 숫자 없이 "+"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1 건 이상) 사형집행 또는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대표치가 나올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전 세계 또는 지역별 통계를 총합하는 경우, "+"는 2 로 계산되었음을 일러둔다.

서문

"…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 사형폐지는 형사사법제도를 적절하고 회복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며 누구도 저버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로렌스 리엔, 싱가포르 하원의원, 2012 년 11 월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가해자의 특성,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사형에 반대하며,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형사사법제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근거를 들어 사형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이 드러난다.

자주 인용되는 근거 중 하나는 사형이 강력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형이 구금형에 비해 더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 국립학술원 국립연구회의는 2012 년 4 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사형이 살인율을 낮추는지, 높이는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 사형이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에 본 연구를 활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1]

찰스 M. 해리스 플로리다 선임재판관은 지난 4 월 "사형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고, 사형으로 더욱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니, 단순히 큰 대가를 치르는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2]

사형이 범죄 억제에 특별히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2012 년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또는 반대파를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다수 사례가 있었다.

이란에서는 지난 6 월 "신을 적대하고 세속에 타락했다는 죄"로 4 명에게 사형이 집행됐으며, 7 월에 사형선고를 받은 5 명은 모두 아와즈에서 일어난 반정부시위에 연루된 사람들이었다. 수단에서는 활동가나 활동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형을 적용했다.

또한 사형은 "간통" 및 "배교", 성인 간의 성관계 등 "가장 중한 범죄"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물론,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는 사법제도의 공정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했다.

이란에서는 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을 바탕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도 상황은 비슷해서 피고인들이 전선으로 구타를 당하고 팔이 매달리거나, 전기충격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공식적인 변호를 받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바깥 사람들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독방에 몇 주씩 수감될 수도 있으며, 오로지 협박으로 얻어낸 "자백"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미국에서는 사형의 차별적인 운용과 잘못된 유죄 선고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별 주(州) 가 잇달아 사형폐지를 하는 데 기여했다.

사형존치국 중 많은 국가가 유사한 심각한 사법제도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도 사형이 옹호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설사 사법제도가 완전하다 해도 사형을 당하거나 사형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형은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 계획적 살인이며, 인권을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의라는 이름으로 계획된 폭력을 저지르면 어떤 사법제도라도 오점이 남는다.

사형존치론자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는 사형이 사회의 위협요소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감옥에 수감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이다.

사형존치국 중 많은 국가들은 여론이 사형을 지지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사형과 같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내 및 국제 인권 기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다르다 해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사형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사형존치국의 많은 정치인, 사법계 인사가 사형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사형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2012 년 사형제도 현황을 보면 세계의 전체 흐름이 사형 폐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형선고를 내린 국가는 전세계의 10 분의 1 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2 년에 후퇴한 부분도 있다. 특히 감비아, 인도, 일본, 파키스탄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했고, 이라크에서는 2011 년에 비해 알려진 사형집행 건수가 놀랄 만큼 증가해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11 년 사형집행은 680 건이 기록되었지만 2012 년에는 최소 682 건이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수는 2011 년 1,923 명(63 개국)에서 2012 년 1,722 명(58 개국)으로 감소했다.

2012 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다수를 차지했던 사형존치국의 수가 이제는 소수로 기울고 있다. 또한, 사형폐지국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이 모두 서로 다른 법제도, 전통, 문화, 종교적 배경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12 년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가 2012 년 사형과 관련해 기록한 것을 보면, 다소의 후퇴는 있었지만 사형폐지를 향한 세계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1 개국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기록했다.[3] 확인된 사형집행 건수는 682 건으로, 21 개국에서 680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던 2011 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682 건에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수천 건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나머지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보다 더 많은 수치다. 확인된 사형집행건수 중 4 분의 3 은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단 3 개국에서 이루어 졌다.

세계 각지에서 사형폐지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 미국은 2012 년 미주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지만, 2011 년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주가 13 개 주였던 데 비해 2012 년에는 단 9 개 주에 그쳤다. 코네티컷 주는 4 월 미국의 17 번째 사형폐지주가 되었다. 그 외 미주 지역에서 사형이 새로 선고된 경우는 12 건에 불과했다.

일부 국가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등 남아시아의 후퇴하는 움직임은 사형폐지를 향해 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난해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사형 관련법 개정을 고려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준수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도 사형폐지를 향해 한층 더 다가가고 있다. 베냉은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절차를 밟았고, 가나는 새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할 예정이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사형수가 없다.

라트비아는 1 월 1 일 마지막 남은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97 번째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됐다.

2012 년 사형폐지 현황

- 미국은 미주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했다.
- 벨라루스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56 개 회원국 중 미국과 벨라루스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 아프리카연합 54 개국 중 5 개국(보츠와나, 감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만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37 개국은 법률상 ·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 아랍연맹 21 개국 중 7 개국[4](이라크,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예멘)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리아에서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했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 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 영연방 54 개국 중 5 개국(방글라데시, 보츠와나, 감비아, 인도, 파키스탄)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 2012 년 유엔 회원 193 개국 중 174 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1 월 27 일, 도미니카공화국은 사형 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Death Penalty)를 비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몽골과 베냉은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2 선택의정서에 각각 3 월 13 일과 7 월 15 일에 비준했으며,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법안이 양국 모두 2012 년 연말까지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9 월에 마다가스카 역시 제 2 선택의정서에 서명했다.

사형수에 대한 감형이나 사면이 이루어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이집트, 감비아,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태국, 튀니지,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트남, 예멘 등 27 개국이었다.

사형수가 무죄로 밝혀진 경우[5]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가이아나, 인도, 나이지리아, 대만, 미국 등 7 개국에서 있었다.

12 월 20 일 유엔총회(UNGA) 본회의에서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네 번째로 채택됐다. 찬성 111, 반대 41, 기권 34 로 채택된 67/176 결의안은 2007 년의 62/149, 2008 년 63/168, 2010 년 65/206 결의안 등 기존 결의안을 재차 확인한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 사형제도를 꾸준히 축소하고 사형 적용 대상 범죄 수를 줄일 것, 사형폐지를 위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를 선포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형폐지국에는 사형제도를 재도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는 2014 년에 열리는 69 차 유엔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며, 유엔 사무총장은 2012 년 결의안에 포함된 촉구사항의 이행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2012 년 결의안에는 국가가 사형제도와 관련해 작성해야 할 정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표현, 임신 중인 여성이나 사건 당시 18 세 이하 미성년자인 사람에게는 사형을 내리지 말라는 명확한 요구,

사형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거나 이를 비준할 것을 고려하라는 촉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2012 년 결의안에는 2010 년보다 더 많은 유엔 회원국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수단, 튀니지는 이전 투표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바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촉구에 힘을 실었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또 다른 조짐으로, 2010 년 모라토리엄에 반대표를 던졌던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가 2012 년에는 기권으로 돌아섰다. 몽골, 사모아, 소말리아가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 지역을 넘나드는 지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몰디브, 나미비아, 스리랑카는 찬성에서 기권으로 돌아섰고, 바레인과 도미니카, 오만은 기권에서 결의안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지역정부간 기구 역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가는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4 월 아프리카인권위원회(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아프리카의 사형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8 월에는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보고서 "미주 인권제도 하의 사형제도: 제한에서 폐지까지"를 발표했다. 두 기구 모두 각 회원국에 무엇보다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 현황

2012 년 최소 21 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리아와 같이 정세가 혼란한 국가에서는 사형집행 여부가 불분명하다. 2011 년에는 동일하게 21 개국이[6]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수치는 10 년 전에 비해 상당한 감소를 보여준다. 2003 년에는 28 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2 년 보고된 사형 집행 건수

아프가니스탄 (14), 방글라데시 (1), 벨라루스 (3+), 보츠와나 (2), 중국 (+), 감비아 (9), 인도 (1), 이란 (314+), 이라크 (129+), 일본 (7), 북한 (6+), 파키스탄 (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7] (6,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사우디아라비아 (79+), 소말리아 (6+; 과도연방정부 5+, 푼틀랜드 1), 남수단 (5+), 수단 (19+), 대만 (6), 아랍에미리트 (1), 미국 (43), 예멘 (28+).

전세계적으로 최소 682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11 년보다 2 건 많은 수치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수천 건의 사형집행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 년 보고서부터 중국의 사형 관련 추정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국가기밀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 년부터 사형선고 및 집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사형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수를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이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형집행이 상당수 이루어졌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수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형집행 건수 대비 175 퍼센트를 상회한다.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일부 소수 국가에서만 입수가 가능했다. 벨라루스, 중국, 몽골, 베트남에서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국가기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벨리즈,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북한, 수리남, 시리아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엄격한 국가 관행,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정보가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시리아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5 년을 제외하고 지난 10 년 간 시리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을 모두 기록해 왔다.

벨라루스와 일본의 사형수들은 자신의 사형이 곧 집행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 가족과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벨라루스와 보츠와나에서는 유족들에게 사형수의 시신을 돌려주지 않아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2012 년 사형 선고 현황

아프가니스탄 (+), 알제리 (153+), 바레인 (1), 방글라데시 (45+), 바베이도스 (2), 보츠와나 (5), 차드 (2), 중국 (+), 콩고민주공화국 (11+), 이집트 (91+), 적도기니 (1), 감비아 (5+), 가나 (27), 기니 (2+), 가이아나 (5), 인도 (78+), 인도네시아 (12+), 이란 (79+), 이라크 (81+), 일본 (3), 요르단 (16+), 케냐 (21+), 쿠웨이트 (9+), 라오스 (+), 레바논 (9+), 라이베리아 (4+), 리비아 (5+), 몰디브 (2+), 말레이시아 (60+), 말리 (10+), 모리타니아 (6+), 몽골 (+), 모로코/서사하라 (7+), 미얀마 (17+), 나이지리아 (56), 북한 (+), 파키스탄 (24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6+: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5+; 서안지구 자치정부 1), 카타르 (1+), 사우디아라비아 (10+), 싱가포르 (2+), 소말리아 (76+: 과도연방정부 51+; 푼틀랜드 7+; 소말리랜드 18+), 한국 (2), 남수단 (+), 스리랑카 (7+), 수단 (199+), 스와질란드 (1), 대만 (7), 탄자니아 (3), 태국 (106+), 트리니다드토바고 (5+), 튀니지 (9), 아랍에미리트 (21+), 미국 (77), 베트남 (86+), 예멘 (7+), 잠비아 (7+), 짐바브웨 (11+).

2012 년에는 58 개국에서 최소 1,722 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최소 수치며, 전세계 63 개국에서 최소 1,923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2011 년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12 년 말 현재 전세계 사형수는 최소 23,386 명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별로 조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최소값이다.

사형집행 방법으로는 참수형(사우디아라비아), 교수형(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남수단, 수단), 독극물 주사형(중국, 미국), 총살형(벨라루스, 중국, 감비아, 북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소말리아, 대만,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을 사용했다.

2010 년, 2011 년과 동일하게 투석형으로 법적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없었다.[8] 수단에서 투석형 선고를 받은 경우가 두 건 있었지만, 이후 판결이 번복됐다.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에서는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형수 최소 2 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 세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출생신고서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범죄자의 실제 나이가 논란이 되는 일이 많다.[9]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이 사형수로 구금되어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2012 년 4 월 19 일 채택된 유엔인권위원회 아동인권에 관한 결의안에서 발췌[10]
[유엔인권이사회]

52. 또한 이러한 선고를 즉시 감형하고, 이미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 특히 사형수는 특수교정시설에서 내보내 수감자의 나이와 죄질에 맞게 적절한 일반 구금시설로 옮길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55. 또한 어린이의 연령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형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유죄가 인정되면 검사 측이 반박하기 전까진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용의자에게 미성년자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69. (f)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사형수인 어린이는 수감자 본인과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앞으로의 사형집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날짜, 시간, 장소를 미리 제공해 사형수에게 마지막 면회 또는 대화를 허가하고, 어린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사형수의 시신을 가족이 매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거나 시신이 위치한 장소를 알려주도록 허가할 것…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즉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통해 받아냈을 가능성이 있는 "자백"을 바탕으로 사형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중국, 이란, 이라크,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이 이에 해당된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심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한 "자백"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면서,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더욱 침해했다.

바베이도스,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의무 사형선고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 의무 사형선고는 피고의 개인적 상황이나 범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고려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인권 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

고의적인 살인과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 6 조에 명시된 "매우 중대한 범죄"의 수준에 이르지 않음에도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제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간통"과 "남색(sodomy)"(이란), "배교"(이란)나 "신성모독"(파키스탄)과 같은 종교 범죄, "마법(sorcery)"(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범죄(중국), 강간(사우디아라비아), 특수강도의 형태(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잠비아) 등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한다. 감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북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말리아에서는 "반역",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와 "국가에 반하는 범죄"(신에 대한 적대심을 나타내는 이란의 "모하라베" 등) 역시 생명을 빼앗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형이 선고됐다. 북한에서는 국내법상 사형선고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2 년에 사형집행을 재개한 나라는 보츠와나, 감비아, 인도, 일본, 파키스탄 등 5 개국이었다. 방글라데시와 케냐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 사형선고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소말리아 등 국가에서는 군사법원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 경우가 있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에서는 재판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사형이 선고됐다.

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사형제도 존치 의지가 감소 추세에 있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미국이다.[11] 미주 대륙에서는 단 4 개국만이 사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2011 년의 43 건과 여전히 동일하지만, 사형을 집행한 주는 2011 년 13 개 주였던 데 비해 2012 년에는 단 9 개 주에 그쳤다. 새롭게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수는 77 명으로, 1976 년 미국 대법원이 사형법 개정안을 승인한 이래 두 번째로 가장 적은 수였으며,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33 개 주 중 18 개 주에서 선고된 것이었다.[12] 2012 년 4 월 코네티컷 주는 17 번째 사형폐지주가 되었으며, 11 월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놓고 진행된 주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2012 년 미국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집행 43 건: 애리조나(6), 델라웨어(1), 플로리다(3), 아이다호(1), 미시시피(6), 오하이오(3), 오클라호마(6), 사우스다코타(2), 텍사스(15)

사형선고 77 건: 앨라배마(6), 애리조나(2), 캘리포니아(13), 코네티컷(1), 델라웨어(1), 플로리다(22), 조지아(2), 루이지애나(1), 미시시피(2), 몬타나(1), 네바다(3), 오하이오(3), 오클라호마(1), 펜실베니아(7), 사우스다코타(1), 테네시(1), 텍사스(9), 연방정부(1)

캘리포니아 724 명, 플로리다 407 명, 텍사스 308 명, 펜실베니아 204 명, 앨라배마 200 명을 포함해 사형수 총 3,170 명

당국에 의한 감형 4 명, 무죄 3 명

그 외 미주 대륙에서는 새로 12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바베이도스 2 건, 가이아나 5 건,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최소 5 건이 이루어졌다.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바베이도스는 의무 사형선고 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쿠바, 도미니카, 그레나다, 과테말라,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서는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된 사례가 없었다. 12 월 31 일 현재 쿠바, 도미니카에는 수감중인 사형수가 없다. 과테말라에서는 대법원 형사부가 과테말라 국내의 모든 사형수에 대해 재심한 결과 53 명이 감형됐다.

2012 년 말 현재 **앤티가바부다**에서 복역중인 사형수는 7 명이다. 2011 년 10 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앤티가바부다의 인권 문제를 검토하며 사형 폐지를 촉구했지만 앤티가바부다 정부는 3 월 15 일 이를 거부했다. 당국은 현존하는 사형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여론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만한 제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바하마에서는 2007 년 저지른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 1 명이 있다. 바하마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해는 2000 년이다.

바베이도스에는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가 6 명이다. 2 명이 새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4 년이다. 4 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 일에 걸친 바베이도스 방문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의무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실천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과 궁극적인 사형 폐지로 나아갈 것" 을 촉구했다. [13]

1998 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된 **캐나다**는 사형수 로널드 스미스의 감형 요구에 대해 어떤 특별한 입장도 나타내지 않았다. 로널드 스미스는 1982 년 2 건의 살인 혐의로 미국 몬타나 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인 캐나다인 2 명 중 한 명이다. 5 월 2 일 몬타나 주 사면 가석방 위원회는 그의 감형 요청을 기각했지만, 9 월 주 법원이 몬타나 주의 독극물 주사 관행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사형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유엔 정기총회에서 네 번째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캐나다는 미주 대륙에서 유일하게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형폐지국이었다.

그레나다는 사형수가 1 명이다. 1978 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과테말라는 새로운 사형선고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월 23 일, 과테말라 대법원 형사부는 국내 모든 사형수를 재심해 53 명을 사형에서 징역형 50 년으로 감형시켰다. 1 명은 여전히 사형수로 남아 있다. 형사부장은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변호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3 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앞서 밝힌 대법원의 감형 조치와 더불어 과테말라가 2000 년부터 사형제도에 관한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충실히 이행해 온 점에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0 년과 2011 년 사형 재개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권위원회는 과테말라 정부에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14]

10 월 24 일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과테말라는 납치, 살인, 강간죄를 대상으로 내려진 사형선고는 모두 범죄예방협회가 제출한 내용에 따라 특별 조치를 통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기 때문에, 현재 과테말라 국내에 남은 사형수는 없다고 밝혔다. [15] 이 감형조치는 미주인권법원에서 국제재판이 이루어진 사형 관련 사건의 판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과테말라 대표는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과테말라 국내법상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을 지지했다.

가이아나에서는 5 명이 새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30 명이다. 5 월 말 당뇨병을 앓던 사형수 강가 디올랄이 조지타운 교도소의 의료 지원 부족에 항의하며 단식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랄은 약물치료나 적절한 식단, 진료소 방문도 거부당했다. 8 월에는 고지혈증을 앓는 하피즈 후세인이 디올랄의 시위에 동참했다. 사형수 가족들은 조지타운 공립병원에는 당뇨나 고지혈증 약이 없다는 말을 사형수들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16] 국제기구는 수용 인원수보다 많은 수감자를 수용해온 가이아나의 고질적인 구금 환경을 반복해서 비판해왔다.

6 월 5 일에는 이안 창 수석재판관 대리가 노엘 토마스, 로렌스 찬, 라빈드라너스 디오, 문타즈 알리 등의 사형을 감형시켰다. 로렌스 찬과 라빈드라너스 디오 두 사람은 2000 년 2 월에 사형집행 영장을 받았다. 이안 창 재판관의 감형 판결은 2010 년 노엘 토마스가 제기한 항소에 따른 것이었다. 토마스는 항소를 제기하며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1992 년부터 수감이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이 기간을 견디는 것은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방식 또는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가이아나 헌법 141 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0 년 가이아나가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약속했던 대로, 가이아나 국회는 8 월 10 일 사형 폐지와 학교에서의 체벌 폐지, 성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관계를 처벌하지 않고 및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종식하겠다는 등 관련된 국가적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행동하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가이아나 국회는 또한 특별선발위원회를 설립해, 법 개정을 위한 국가적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한 위임 사항을 보면 가이아나 국민들, 특히 피해자 가족과 범죄학자, 전문가들의 사형제도와 그 폐지 가능성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17] 11 월 28 일 특별선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제니퍼 웹스터 복지사회보장부 장관이 선출됐으며, 2012 년 말 현재 아직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자메이카는 사형수가 7 명이다. 1988 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1 년 제출된 2012 수감절차법은 치안판사의 예비심문을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여 심리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2012 년 말 현재 자메이카 국회 공동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정 조항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자메이카 헌법 3 장에 포함된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헌장에 위배되고 있어, 노만 맨리 로스쿨[18]을 비롯해 이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9 월 27 일에는 사형폐지국인 **푸에르토리코** 출신 배심원단이 미국 연방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거부했다. 에디슨 부르고스 몬테스는 미 당국과 협력해 자신을 조사했던 매들린 세미디 모랄레스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는 3 월 21 일 동카리브 사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로 사형수 4 명이 감형됐다. 쉘든 이삭은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심리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유죄판결이 파기됐으며, 로미오 캐노니에, 루드니 윌리엄스, 루이스 가드너는 감형을 받았다.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1 명이다.

공정재판 보장을 침해하는 항소권의 기간 제한

로미오 카노니에[19]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 관련 사건에서 항소권에 존재하는 시간 제한에 관한 판단이다. 동카리브 대법원[20]에서는 사형 관련 사건에서의 항소 가능 기간을 14 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사형 사건이 아닐 경우 재량에 따름) 동카리브 대법원법 제 52 조 제 2 항이 세인트키츠네비스 헌법 제 10 항과 자유권규약 제 14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를 준비할만한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가질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법원은 동카리브 대법원법 제 52 조 제 2 항은 사형 사건과 아닌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재량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인트루시아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2012 년 말 기준으로 사형수가 각 1 명이다. 5 월 31 일, 동카리브 사법재판소는 2006 년 저지른 살인 혐의로 2008 년 유죄가 확정되어 사형을 선고 받은 숀 사무엘을 감형시켰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최소 5 명이 새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가 36 명이다.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트리니다드토바고 항소법원에 5 명이 연관된 4 건의 사형 사건을 회부했다. 나이젤 브라운은 변호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됐으며 새로 발견된 증거를 볼 때 그의 유죄판결도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다.[21] 마커스 제이슨 다니엘 사건은 새로 발견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경계성 성격장애"와 "알코올성, 약물성 정신질환"에 따른 한정책임능력으로 변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22] 디니쉬 벤자민, 더찬 강가, 말론 타이트 사건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드문 형벌로 트리니다드토바고 헌법 제 5 조 제 2 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따라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항소법원에 회부했다.[23]

미국의 총 사형 집행 건수의 4 분의 3 이 애리조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텍사스 4 개 주에서 이루어졌다. 사형수들은 모두 펜토바르비탈을 이용한 독극물 주사를 맞고 사형에 처해졌는데, 펜토바르비탈은 이전 사형집행에 이용됐던 약물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최근 대체약품으로 도입된 것이다.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에서는 3 명의 판결이 번복되어 무죄로 판명되었다.[24]

사형제도 운용 시 국제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주에서는 인종차별과 제도적 결함이 문제가 됐다.[25]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도 했다.[26]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서는 군사법정을 통해 외국인 6 명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제공정재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아래서 사전심리절차가 계속됐다. 이러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명시된 자의적으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카몬 헌은 텍사스 주 사면가석방위원회에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지만 거부되었고, 주지사와 법원의 개입도 거부해 7 월 18 일 사형에 처해졌다.

헌은 1998 년 저지른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9 세였던 그는 발달장애가 있었는데, 변호인이 입수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적장애'에 해당할 정도였으므로 헌의 사형집행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된다. 변호인단은 요카몬 헌이 심리나 항소 당시 헌법상 유효한 법정대리인 선임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돌려보내려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10 월 10 일, **조나단 그린**은 텍사스 주에서 릭 페리 주지사의 임기 내에 사형이 집행된 248 번째 사형수가 됐다. 사형집행 2 일 전, 연방법원은 그린의 사형집행 유예를 허락했다. 그린의 변호인은 그린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으며, "악마가 자신을 놓고 영적 전쟁을 벌인 끝에" 살해당할 거라 믿고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조나단 그린이 "심각한 망상, 환각, 형태적 사고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또한 그린의 2003 년 교도소 기록에 "시각적, 청각적 및 신체 환각을 포함한 정신질환 경과를 보인다. 일례로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휴지를 귀에 틀어박기도 한다. 귀에 박힌 휴지를 제거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에도 주목했다. 미국 제 5 순회항소법원은 그린의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다는 주 정부 발의를 승인했고, 미 대법원과 페리 주지사 모두 개입하지 않아 그대로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수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왼팔이 죽을 듯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인종차별적으로 사형제도를 운용한 사례도 계속해서 기록됐다. 컴버랜드 카운티 상급법원의 그렉 윅스 판사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인종정책법(RJA)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마커스 로빈슨, 틸몬 골핀, 크리스티나 월터스, 퀸텔 어거스틴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재선고 받았다. 윅스 판사는 검찰 측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심원을 배석시키지 않기 위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방법을 적용했음을 알게 되었다. 윅스 판사는 12 월 골핀, 월터스, 어거스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4 월 로빈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인종정책법의 범위를 좁히면서 인종차별의 증거를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의 증거로 드러난 추악한 인종차별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종차별의 악습이 없는 사법제도, 법 아래 평등한 정의라는 우리의 이상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제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7]

4 월 코네티컷은 2007 년 이후 미국의 다섯 번째 사형폐지주가 되었으며[28], 콜로라도, 메릴랜드, 뉴햄프셔에서도 사형폐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 형사사법제도하의 사형제도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제 입장은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사형제도 옹호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수 년을 검사로 살아가며, 살인범과 같은 위험한 흉악범들을 법정에서 추궁했습니다. 형사법정의 전면에 서서, 저는 미국의 사법제도가 아주 불완전하다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민주사회의 가장 고귀한 이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제도지만, 대부분의 인간 경험이 그러하듯이 오류를 범하기도 쉬운 제도입니다. 형편없는 변호를 받는 사람들을 보았고,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거나 신원이 잘못 밝혀진 사람들을 보았으며, 차별도 보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저는 사형제도가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널 P 말로이, 코네티컷 주지사, 사형폐지법에 서명한 후의 연설에서, 2012 년 4 월 25 일

미국 내에서 사형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조짐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11 월 6 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가 복역 중인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34 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한 결과 6%(약 500,000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71% 대 29%로 캘리포니아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켰던 7 번 개정안에 대한 1978 년 국민투표에 비하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7 번 개정안의 발의자이자 34 번 개정안을 지지하는 론 브릭스는 "캘리포니아의 사형법이 만들어낸 무능한 합법적 괴물은 매년 1 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소비하며 검사와 피해자들의 삶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연구회의 산하 범죄억제와 사형에 관한 위원회는 2012 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낮추는지, 높이는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사형이 살인율을 일정량 낮추는지, 높이는지, 혹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를 설명하는 연구가 사형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29]

미주 인권위원회는 8 월 "미주 인권제도 하의 사형: 제한에서 폐지까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30] 이 보고서는 지난 15 년간 미주 지역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주요 발전 사항을 요약하고, 국제적, 지역적 기준에 따라 사형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에 사형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미주 위원회와 법원의 결정, 특히 사형과 관련된 개인 사건과 예방책, 임시 대책에 관한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남아시아에서 일부 후퇴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발전 사항도 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국가 수가 2011 년보다 1 개국 많은 8 개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베트남[31]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는 사형 관련 법안 개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준수했다. 몽골은 3 월 13 일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한국, 스리랑카, 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태평양 지역은 작년에 이어 사실상 사형제도가 거의 운용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형을 집행했으나, 중국 내 사형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로 인해 중국의 정확한 사형제도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수치도 확인할 수 없었다. 몽골에서는 사형이 국가기밀로 다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을 여전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제도 현황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14), 방글라데시 (1), 중국 (+), 인도 (1), 일본 (7), 북한 (6+), 파키스탄 (1), 대만 (6) 등 8 개국에서 최소 38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건의 사형집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12 년 새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 방글라데시 (45+), 중국 (+), 인도 (78+), 인도네시아 (12+), 일본 (3), 라오스 (+), 말레이시아 (60+), 몰디브 (2+), 몽골 (+), 미얀마 (17+), 북한 (+), 파키스탄 (242), 싱가포르 (2+), 한국 (2), 스리랑카 (7+), 대만 (7), 태국 (106+), 베트남 (86+) 등 19 개국에서 최소 679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도의 운용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기준을 위반하여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의무적인 처벌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통해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부당하게 사형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유권규약 제 6 조에 명시된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일이 계속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형선고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요청이 30 건 있었고, 14 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11 월 20 일과 21 일 각각 8 명과 6 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살인, 강간, 납치, 반역 혐의로 처형되었다. 2012 년 말 기준으로 최소 250 명이 사형수로, 2 월 10 명의 사형수가 대통령의 지시로 감형됐다.

방글라데시는 2012 년 1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고, 최소 45 명에게 새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약 1,000 명이다. 2 월 15 일 방글라데시 국회는 인신매매에 대한 최고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2012 인신매매방지 및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날인 16 일에는 특정 상황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2012 반테러리즘법(개정안)을 채택했다.

중국은 전 세계 총 사형집행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내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중국의 사형제도 현황 실태를 충분히 보여줄 만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중국 국영 대중매체는 "부정한 재산 축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여성 사업가 우 잉과 같이 세간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했지만,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을 활성화시킬만한 충분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리는 2007 년 사형선고에 대한 검토를 재개한 이후 총 사형 집행 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증명된 바는 없다.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나 마약 밀매 또는 금융범죄와 같이 자유권규약 제 6 조에 명시된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수가 선처나 감형을 호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국내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홍콩의 **로버트 샨 샤오메이**와 대만의 **리엔 성칭**은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이 이들의 사형을 승인한 후 3 월 30 일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54 세의 로버트 샨 샤오메이는 마약 밀매, 마약 불법소지 및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2009 년 6 월 26 일 사형이 선고됐다. 59 세인 리엔 성칭은 같은 재판에서 마약제조 및 밀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광둥성 주하이에 위치한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2010 년 12 월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005 년 12 월, 중국 당국의 제보를 받은 홍콩 경찰은 물류 터미널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질 예정이었던, 마약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2 개를 억류했다. 그러나 홍콩 마약국의 고위 조사관은 이후에 리엔 성칭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는 본래 소유주인 회사로 돌려보냈다고 썼다.

2005 년 12 월, 광둥 공안은 두 사람을 체포해 중국에서 홍콩을 통해 마약류인 크리스탈 메스암페타인 192kg 을 필리핀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 중, 광둥성 인민법원은 편지에 공식 경찰 스탬프가 찍혀 있지 않고, 홍콩 경찰이 이후 이 편지가 잘못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는 이유로 편지를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고인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두 사람이 마약 밀매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리엔 성칭은 사형 집행 직전 가족과 만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교도소에서 면회를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은 리엔 성칭의 변호인에게 고등인민법원의 결정에 대해 통보했지만, 변호인과 가족에게 사형 집행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다.

6 월 11 일 중국 국무원 사무처는 중국 인권행동계획(2012-2015)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모든 사형 관련 사건에 인권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즉 항소심 재판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피고인의 심문을 허락해 피고측 변호인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며, 사형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판결을 공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월 1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해 2013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 선고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의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처 변호인을 지정하지 못한 모든 형사용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률구조처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법률구조처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관련 단체가 이를 따르는 데 관한 시간 기준도 개정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사형 관련 사건의 모든 재판 과정에서 법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항소심과 최종 심리 과정에서의 피고측 변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욱 명백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11 월 중국 정부는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에게서 적출한 장기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3 년 초부터 전국에 걸친 장기 기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04 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형폐지로 향해 가는 지역 및 세계적 흐름에 역행했다. 2008 년 뭄바이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이 선고된 파키스탄 총기범인 아즈말 카삽에 대해 11 월 21 일 사형이 집행됐다. 최소 78 명이 새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2012 년 현재 400 명 이상이 사형수다.

2012 년 말 취임한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은 아즈말 카삽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을 기각하고 또 다른 사형수에게 감형 조치를 내렸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무커지 대통령은 남성 13 명, 여성 1 명 등

총 14 명의 사형을 재고하라는 탄원을 내무부로 돌려보냈는데 이 탄원에 참여한 14 명은 전직 판사로, 사형선고가 잘못 내려졌다고 보는 13 명의 사형수에 대해 감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32]

아즈말 카삽의 사형이 집행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도 당국은 아즈말 카삽의 선처 탄원을 정리된 순서대로 보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검토했다. 또한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뒤에서야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도 내무부는 인권활동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 대법원은 11 월 두 명의 사형수에게 종신형으로 감형 처분을 내렸다. 인도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기준은 대체 형벌인 종신형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형선고가 가능한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사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선고 원칙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도 대법원은 또한 금지된 화기를 사용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33]

5 월 24 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인도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인도는 사형은 종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강력한 보호 절차를 거쳐 적용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주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면, 형 집행 취소, 감형 또는 유예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2004 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존중하고,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고려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지지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08 년부터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소 12 명이 새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2012 년 말 현재 최소 130 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수 중 절반 이상이 마약 밀매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12 월 31 일 기준으로 113 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 한다.

5 월 21 일 검찰은 큰 관심을 모았던 우마르 파텍 사건에 대해 사형 대신 종신형을 구형했다. 우마르 파텍은 2000 년과 2002 년 202 명의 희생자를 낸 두 차례의 폭탄 테러와 관련해 살인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코 수얀코 정치법률안보규제장관이 6 월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인을 돕기 위해 2011 년 마련된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팀이 중국, 이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최소 67 명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감형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6 월 18 일, 인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수 2 명이 자신들의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 354 조와 하위 제 4 조를 검토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 항소는 2 명 이상이 공모해 절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서 사형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9 월 27 일 대법원은 지난 4 월 재판부가 헹키 거나완 사건의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 3 조와 인도네시아 헌법 제 28 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목적은 교육 및 교화,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2 년 최소 2 명의 사형수에 감형 조치를 내렸다.

인도네시아는 5 월 23 일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2008 년 이후 사형집행을 유예해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간주되며, 중대한 범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어왔고, 2007 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다루었다 점을 주목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운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2 월 20 일 유엔 총회에서 네 번째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인도네시아는 반대에서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

파키스탄의 직물공인 **줄피카르 알리**는 헤로인 300g 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끝에 2005 년 6 월 사형이 선고됐다.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헤로인이 알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목격자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진술에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미결 구금 중 알리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당했는데, 이는 국제인권기준과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 대사관과 접촉할 권리도 거부당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

줄피카르 알리는 구금된 뒤 한 달 후에야 변호사 접촉이 허락됐다. 그는 2004 년 11 월 21 일 체포된 이후 2005 년 1 월 21 일까지 반다라 소에카노 하타 지방경찰에 의해 거의 매일같이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금 중에는 자백에 서명할 때까지 고문이나 학대를 당했다고도 했다. 알리는 이후 구타로 인해 위와 간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다.

줄피카르 알리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고, 지금은 중부 자바에 위치한 케덩 판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실물 증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3 월 29 일 일본에서 3 명이 처형되면서 20 개월 만에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당시 일본 법무장관이었던 토시오 오가와는 장관으로서의 '의무'라 정당화하며 사형집행을 승인했다. 지난해 남성 6 명과 여성 1 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며, 3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2012 년 말 현재 일본의 사형수는 133 명이다.

유키노리 마츠다는 2 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6 년 9 월 쿠마모토현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9 월 27 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마츠다는 2009 년 4 월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철회했다. 일본에서는 사형 관련 사건을 의무적으로 항소하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에, 마츠다의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 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0 월 31 일 일본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일본 대표부는 국민 대부분이 잔혹한 범죄인 경우에는 사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잔혹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는 부적절하게 본다고 밝혔다. 또한 법에 규정된 대로 사형수를 독방에 하루 24 시간 구금하는 것은 사형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수감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본 대표는 2013 년 3 월 열리는 22 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까지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사형제도에 관해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수용하는 깊이 있는 토론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것, 사형을 폐지하거나 그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이요 칸고쿠' 제도(경찰이 수감자를 최대 23 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제도)를 재검토할 것 등의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에 동의했다.

12 월 16 일 선거에서 사형 존속을 찬성하는 자유민주당 소속 신조 아베가 총리로 선출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소 60 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사형 집행 건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930 명 이상이다. 마약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무

사형선고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사형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었다.

2 월 12 일 말레이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블로거인 함자 카시가리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인도했다. 카시가리는 트위터에 예언자 마호메트를 모욕한 것으로 추측되는 글을 올려 배교 혐의로 저명한 성직자에게 기소를 당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7 월 마약범죄에 관한 의무적 법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 월에 접한 소식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사형 대신 징역형으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7 월 자유권위원회가 **몰디브**의 의무사항 이행을 검토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몰디브가 사형제도에 관한 모라토리엄은 채택했지만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는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편 감형과 사면에 관한 법 제 21 항에 대한 수정 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수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대법원이 유지해야 하며, 몰디브 헌법 제 115 조에 의한 대통령의 사면조치도 막을 수 있다. 2012 년 말 현재 이 수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자유권위원회는 몰디브 정부에 사형 폐지를 고려할 것이며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법령집에서 의무 사형선고 제도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34]

3 월 13 일 **몽골**은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으며, 2012 년 말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몽골 대통령은 사형수 9 명을 감형시켰다.

미얀마는 최소 17 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1 월 2 일, 64 회 독립기념일을 맞아 남성 31 명과 여성 2 명의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북한은 2012 년 최소 6 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제앰네스티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지도자 김정은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은 불가능했다. 북한에서 집행된 사형 중 대부분이 조사나 심리, 선고 등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이루어졌다. 사법부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북한 국내 형법상 사형선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사형집행 못지 않게 공개처형도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려는 주민들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국경수비대에 의해 초법적 처형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은 구금과 고문, 부당대우, 사형의 위기에 처해 있다.

11 월 15 일 **파키스탄**은 2008 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군 당국은 병사인 무하메드 후세인을 상관 및 2 명 살해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번 사형 집행은 군 내부 사건이며 파키스탄 정부의 현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2 년 말 현재 8,300 명 이상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며, 242 명이 새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6 월 26 일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인 사랍짓 신흐가 감형을 받았으므로 곧 석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날, 사실은 정부가 석방 예정이던 다른 수감자와 혼동해 이를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 월 30 일 카라치에서 파키스탄인 베흐람 칸의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베흐람 칸은 변호사였던 모함마드 아쉬라프를 살해한 혐의로 2003 년 6 월 23 일 반테러리즘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은 연기되었다.

발로지스탄의 마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5 명의 사형수들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35] 파키스탄 정부는 7 월 모든 사형 선고를 종신형으로 감형시키는 법안 초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36]

10 월 30 일 진행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파키스탄은 2013 년 3 월 22 차 유엔 인권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의무 사형선고를 규정한 법 조항을 모두 폐지할 것과, 사형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할 것, 국내법상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등의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겠다고 동의했다.

싱가포르[37]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 2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최소 32 명이다.

7 월 9 일 싱가포르 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사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 사형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 약물오남용법 (개정안) 과 2012 형법 (개정안)은 11 월 14 일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법원에 특정 상황에서 사형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권이 부여됐다. 사형 사건의 경우, 피고는 살인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 마약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단순히 불법 마약의 운반, 전송, 배달만 했거나 혹은 이런 행동을 하라고 제안을 받은 위치라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행위나 실수에 대한 정서적 책임감이 상당히 손상되는 등의 정신이상" 을 앓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에도 사형을 면할 수 있다.[38]

이 같이 의무 사형 선고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지만, 대체 형벌로 태형이 포함된 점, 사형 선고 대상자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된 점 등 제안된 방법이 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중앙마약단속국을 도와 마약밀매를 교란하는 활동을 해서 만족을 시켜야만 사형을 피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측은 개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사형수 32 명이 사형 선고를 재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인 **용 브이 콩**은 싱가포르에서 사형이 집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07 년 체포될 당시 19 세였던 용 브이 콩은 헤로인 47g 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의무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 당시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이는 마약밀매에 해당돼 의무 사형선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용 브이 콩은 운반원이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싱가포르로 규제 약물을 운반하라고 강요한 조직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사람을 확인해 주었다. 우두머리에 대한 기소는 각하됐다. 용 브이 콩은 약물오남용법(개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재심을 기다리는 사형수 32 명 중 한 명이다.

한국에서는 2 건의 사형 선고가 새로 내려졌고,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63 명이다. 2008 년, 2009 년, 2010 년 국회에 세 차례 걸쳐 제출된 사형폐지 관련 법안은 5 월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10 월 25 일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중, 한국은 법무부 자문기관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법정 형벌로 사형이 포함된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한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스리랑카는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찬드라시리 가자디라 교정장관이 교수형 집행인 2 명이 공석임을 광고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티사 카랄리야다 아동개발여성부장관은 7 월 일간지 *더 네이션*에 사형 선고 가능 범죄에 강간을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각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39] 11 월 1 일 스리랑카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스리랑카는 사형폐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지지하지 않았다.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800 명 이상인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다. 스리랑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해는 1976 년이다.

대만에서는 12 월 21 일 6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으며, 7 명이 새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약 120 명이며, 55 명은 법적 항소 가능 횟수를 모두 소진하여 사형집행의 위험에 처해 있다. 사형수의 가족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다. 영안실에 시신을 수습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야 알게 된다. 사형제도 폐지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켜달라는 국내외 요청에 대해 데이비드 린 외무장관은 대만 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 를 통해 대만 정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40]

4 월 대만 고등법원은 21 년 전 2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남성 3 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각하했는데, 당시의 유죄 판결이 신뢰할 수 없는 자백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만의 사형제도 운용에는 여전히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남아 있다.

1989 년부터 사형수로 복역 중인 대만의 **치우 호슌**은 언제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치우 호슌은 1988 년 2 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11 명과 함께 체포됐다. 12 명 모두 구금 후 4 개월간 독방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금지됐으며 자백을 위해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치우 호슌은 눈을 가리고 묶인 채로 얼음 위에 앉게 하고, 전기 충격이나 입과 코에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심문 과정은 한 번에 10 시간씩 계속됐으며, 5~6 명에게 구타도 당했다. 그 결과 왼쪽 귀의 청력이 심각하게 약화됐으며 편두통을 앓게 되었다.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로 11 명의 공동 피고인들은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치우 호슌만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94 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 명과 경찰 10 명은 고문을 통한 자백 유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치우 호슌과 공동 피고인들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물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11 년 제기한 항소가 실패로 돌아간 뒤, 치우 호슌은 법원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판사들은 내가 무죄임을 밝힐 용기가 없는 건가요?"

11 월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관한 전 유엔 특별조사관 만프레드 노와크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에이브 리델은 마잉저우 대만 대통령에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두 사람이 유엔 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만의 보고서 검토를 위해 2013 년 대만을 방문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12 월부터 모든 사형 사건의 대법원 심리에서는 판결과 해당 주제에 대한 구두 변론을 검사와 피고 변호인 모두 진행해야 한다. 그 후 배심원단은 판결을 결정할 때 피해자 가족의 의견 역시 참작해야 한다.

태국에서는 최소 106 명이 새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650 명 이상이다. 태국 교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월 15 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 년 10 월 5 일 이루어진 태국에 대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결과를 채택했다. 태국 당국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현행법을 검토하거나 수정하라는 권고를 거부해, 사형 폐지 가능성을 가늠하는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태국은 2009-2013 인권행동계획을 통해 사형 폐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 2012 년 내내 태국 당국 등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더 신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베트남은 2012 년 유럽연합(EU)의 수출 금지로 독극물 주사에 사용되는 약물 공급이 불가능한 탓에 사형 집행을 보류했다. 베트남은 2011 년 7 월 총살형에서 독극물 주사형으로 사형 집행 방식을

바꾸고 새로 바뀐 방식에 따라 6 개의 사형 집행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EU 가 설비 및 물질 거래를 제재하면서 베트남의 사형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11 월 후잉 응히아 베트남 국회부의장은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의 통계를 인용해[41], 508 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의 사형선고는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사형 집행 수단이 부족해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사형반대네트워크(ADPAN)의 활동과 범위는 2012 년에도 확장되었다. 2012 년 말 현재 회원국은 26 개국이다. 아시아사형반대네트워크는 11 월 홍콩대학교에서 세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불공정 재판 및 의무적 사형 선고, 외국인 사형수에 대한 활동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엄격한 비밀을 유지한다. 2012 년 최소 3 명이 사형에 처해졌다.[42]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항소가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겨우 몇 시간 만에 심지어 몇 분만에 사형이 집행됐으며,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뒤통수에 총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형수와 그 가족에게는 곧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며, 가족은 사형이 집행된 뒤 며칠 뒤, 혹은 몇 달 후에야 소식을 알게 된다. 사형수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으며, 어디에 매장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울라즐라우 카발유와 드미트리 카나발라우는 벨라루스에서 2011 년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3 월 사형에 처해졌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단을 주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알약산드르 루카셴카 벨라루스 대통령은 두 사람의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선언하며 2012 년 3 월 14 일 선처를 거부했다.

울라즐라우 카발유는 이후 자백을 철회했는데, 자신은 압박을 받고 자백한 것이며 총을 쏘겠다는 위협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발유의 어머니인 루보우 카발유아는 두 사람이 신문 중에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3 월 17 일, 루보우는 아들의 사형집행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이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카발유의 요청을 참작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음에도 카발유의 사형집행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10 월 자유권위원회는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 벨라루스가 무엇보다도 자유권규약 제 6 조, 제 7 조, 제 14 조에 명시된 카발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이는 그의 어머니와 여자 형제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자유권규약 제 7 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한데, 가족을 의도적으로 협박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불확실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43]

라트비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군법상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1 월 1 일 발효되면서, 세계 97 번째 완전 사형폐지국이 됐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었다. 5 월 1 일 모든 상황에도 예외 없이 사형폐지를 다루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인권협약, ECHR) 제 13 의정서가 시행됐다.

러시아는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을 1996 년부터 시행했고 2009 년 11 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시켜 사형 모라토리엄을 준수하고 있다. 6 월 러시아는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할 것과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 13 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현재 러시아 두마(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유엔에 알렸다.[44]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진전이나 입법 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러시아는 유럽이사회 회원국 중 사형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전시에는 당사국에 사형 존치를 허용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유럽인권협약 제 6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11 월 유엔 고문반대위원회는 러시아에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사형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했다.[45]

타지키스탄은 2004 년부터 시행한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준수하고 있다. 3 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결과, 타지키스탄은 형법 개정의 일환으로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사항을 지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다.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들은 사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유럽평의회 의회는 벨라루스에 사형 완전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 러시아에 법적 사형폐지와 유럽인권협약 제 6 의정서를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46]

7 월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는 압달 라힘 알 나시리와 관련해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폴란드, 루마니아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47] 알 나시리를 유럽에 비밀 구금하고, 사형의 대상이 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결국 2006 년 9 월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로 보내는 데 두 나라가 공모했다는 내용이었다. 알 나시리는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2000 년 예멘 아덴에서 미 해군 전함 콜(Cole) 호 공격과 관련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국제 공정재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군법제도 하에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2012 년에 걸쳐 알 나시리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전심리절차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재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알미르 라포 사건의 판결문에서, 유럽인권협약 제 13 의정서는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에 명시된 의무와 함께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인도하기 위해 개인을 구금해서 자기 사법권 하에서 개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당할 실제적 위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피고인을 인도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충분한 확증을 찾아 입수했다면, 이 규정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48]

6 월 25 일, **유럽연합**(EU)은 우선 사항으로써 사형폐지에 대한 캠페인을 포함해 유럽연합의 인권활동 범위 전체를 다루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를 채택했다. 캐서린 애쉬튼 유럽연합 외교 고위대표는 사형제도에 관한 공식 발표에서 무엇보다도 벨라루스,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파키스탄,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에 대해 비판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사형제도 운용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사형제도 운용을 삼가는 등 긍정적인 발전 사항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라크에서의 사형집행이 놀랄 만큼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특히 시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계속되는

불안정과 폭력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만 제공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튀니지에서 사형수 125 명이 과도정부의 감형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제출된 튀니지 헌법 초안에서는 사형이 제외되지 않았다. 이집트의 새 헌법은 생명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사형을 제외하지 않았다.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는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는 권고사항을 거부했다.

이 지역 총 19 개국 중 이란(314+), 이라크(129+), 팔레스타인 자치정부(6,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사우디아라비아(79+), 아랍에미리트(1)와 예멘(28+) 등 6 개국에서 최소 557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이는 2011 년 확인된 558 건과 거의 동일한 수치지만, 2011 년에는 더 많은 8 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나 시리아의 사형집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소수 국가에 매우 높은 사형집행 건수가 집중되었다는 점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의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건수가 이 지역 내에서도 드문 사례임을 보여준다. 2011 년과 마찬가지로, 이 4 개 국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인된 총 사형집행 건수의 99%를 차지했다.

이라크와 그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자지구 하마스 정부)는 이 지역에서 2011 년에 비해 사형집행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유일한 지역이었다. 이란과 예멘은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알제리 (153+), 바레인 (1), 이집트 (91+), 이란 (79+), 이라크 (81+), 요르단 (16+), 쿠웨이트 (9+), 레바논 (9+), 리비아 (5+), 모로코/서사하라 (7+),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6+: 5+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1 서안지구 자치정부), 카타르 (1+), 사우디아라비아 (10+), 튀니지 (9), 아랍에미리트 (21+), 예멘 (7+) 등의 16 개국에서 최소 505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시리아에서의 사형선고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총 사형을 선고한 국가의 수는 리비아와 튀니지가 사형제도 운용을 재개하면서 2011 년 15 개국에 비해 증가했다. 확인된 총 사형 선고 건수는 2011 년 최소 750 건에서 2012 년 505 건으로 상당히 감소했다.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알제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서사하라, 튀니지 정부에서 사형선고는 내렸지만 계속해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바레인은 2 년 연속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지역 내 일부 국가는 사형선고 건수를 줄이거나 감형 조치를 하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의무를 개정하는 등의 뚜렷한 행보를 보이는 나라는 아주 드물었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가시적 행보를 취했다.

지역 내 사형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법적인 우려가 팽배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마약 범죄와 반테러법상 혐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지닌 정치적 “범죄”로 사형이 부과되는 일이 빈번했다.

2012 년에는 공정재판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집트, 레바논, 리비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서안지구 자치정부;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종종 일반인을 상대로도

사형을 선고했다.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에서는 용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인이 재판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공석 재판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있다.

알제리,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에서는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통해 받은 "자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이렇게 강요된 "자백"을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TV 로 방송하면서 재판의 불공정성이 더욱 악화됐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외국인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혐의로 기소됐을 때, 심문이나 재판 과정에 통역사가 참석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사형집행 건수가 많은 국가들 역시 국제 공정재판기준을 따르지 않은 재판이 대단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알제리에서 최소 153 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대부분이 테러 관련 혐의로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살인 혐의였다.

바레인에서는 2 년 연속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3 월 1 건의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레인 사람이 대상이었다. 1 월 9 일, 바레인 파기법원은 2011 년 군사법원인 국립안전법원과 산하 항소법원이 내린 2 건의 사형선고 원심을 파기했다. 2011 년 3 월 반정부시위 당시 경찰 2 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 알리 압둘라 하산 알 산키스, 압델라지즈 압델리다 이브라힘 후세인은 바레인 독립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을 위해 형사고등법원에 회부됐다.[49]

9 월 19 일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결과, 바레인은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를 포함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거부하면서, 이 같은 정책은 바레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제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12 월, 바레인은 사형제도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요청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이전의 기권 입장을 바꿔 반대에 투표했다.

이집트의 사형 관련 정보는 점차 입수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군사법원을 포함해 최소 91 건의 사형이 선고됐다. 3 월 이집트 최고군사법원은 2011 년 2 월 군 장교 1 명을 살해한 혐의로 2 명의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모하메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과 하비브 엘 아들리 전 내무부장관은 2011 년 시위 당시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50]

형사법원의 사형선고 판결은 모두 이집트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그랜드 무프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내야 한다. 12 월 이루어진 총선 이후 채택된 새 헌법은 사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어,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또한 새 헌법은 주로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바탕으로 하고, 여론이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형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 월 이집트 비상법원은 이슬람 무장 단체 모노시즘과 지하드(*엘 타위드 위 엘 지하드*) 소속 14 명에 대해 2011 년 시나이 반도 북부에서 병사들과 보안군을 공격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상법원의 공정재판 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11 월 이집트 거주 콥트인 7 명과 미국인 목사인 플로리다 출신 테리 존스는 논란이 된 영화 '*무슬림의 순수(Innocence of Muslims)*'에 관련된 혐의로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이들이 이집트의 국가 결속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결하고 해당 사건을 무프티에게 보냈다.[51] 많은 이슬람 신도가 이 영화를 모욕적으로 여겨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란은 매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다. 2012 년에도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물론 소수자들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제법상 "가장 중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강요된 "자백"을 증거로 이용하거나, 마약금지법상 모든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할 권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공정재판 기준을 위반한 심리 절차를 통해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미성년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52]

이란 정부는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비밀리에 대량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다. 이란 정부나 국영 또는 인가된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 인정된 사형집행 건수는 314 건이지만, 신뢰할만한 정보에 의하면 최소 230 건의 사형집행이 더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이란의 2012 년 총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544 건이 된다.

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형 선고 건수는 최소 79 건이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은 최소 37 건이 더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실제 사형 선고 건수가 훨씬 높을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최소 여성 3 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며,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 최대 4 명이 혐의를 받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 세 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공개처형 건수는 또다시 증가해 최소 63 건이 이루어졌다. 2011 년에는 50 건이 기록됐으며, 2010 년에는 14 건이었다. 이란 정부는 공개처형이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와 시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범위는 여전히 넓어, 특히 살인, "간통", "배교", "남색"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와 "세속적 부패"(*입샤드 필-아즈*) 등 모호하게 정의된 범죄도 포함되었다. 6 월 이란 대법원은 술을 마신 혐의로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 2 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2 년 최소 223 건, 공식 발표된 사형집행 중 71%가 마약 범죄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란법상 마약을 일정량 이상 소지하거나 밀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며,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제법상 명시된 상위 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마약금지법 제 32 조는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나 대법원 또는 검찰총장에 의해서만 형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해당 사형선고는 검찰총장에 회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 년에 쌍방간 또는 유엔의 마약법 시행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란에 제공되는 금전적, 기술적 지원이 마약거래 방지와 마약 밀매 용의자 체포를 돕기 위한 의도였으나 사실은 오히려 마약범죄로 인한 체포와 여기에 이어지는 사형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다.[53]

사에드 세데기는 10 월 22 일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다. 그는 남성 3 명과 함께 메탐페타민 512kg 을 구입하고 소지하는데 참여한 혐의로 5 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사에드의 국선 변호사는 재판 전에 사에드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그의 사건 파일을 열람하지도 않았다. 사에드 세데기는 아편과 마리화나 21g 을 개인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200 만 리알(약 미화 163 달러)의 벌금형과 채찍형 20 회를 선고 받았다. 2010 년 12 월, 마약금지법 개정으로 메탐페타민(필로폰) 등의 불법 마약류의 종류가 추가되면서 사형 선고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사에드 세데기의 가족들은 사에드가 교도소에서 모의 처형의 대상이 되는 등의 고문을 당했고 치아 3 개가 빠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에드 세데기는 또한 가족들에게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카메라 앞에서 그의 죄를 "자백"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사형이 집행된 뒤,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됐지만 당국은 가족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금지했다. 10 월 11 일, 사에드 세데기의 형제 **마지드 세데기**는 BBC 페르시아어 방송과 보이스오프아메리카에 사에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인터뷰를 한 뒤 체포됐다. 마지드는 4 일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이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라는 범죄는 무장 반란, 더 일반적으로는 무장 폭력 활동 감행을 대상으로 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정부에 대항해 무기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정부에 대항해 무기를 사용한 단체에 속하기만 해도 "신에 대한 적대"로 유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무기를 사용한 피고인이 아니라, 이란에서 금지된 단체의 회원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적용돼 왔다. 이란의 소수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아와즈 아랍인과 발루치, 쿠르드족 등의 정치적 단체와 연관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최소 쿠르드 족 19 명이 금지된 쿠르드족 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 월 19 일 무렵, 타하 헤이다리안과 아와즈 아랍인 3 명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에서 시위가 계속되던 중 2011 년 4 월 경찰관 1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신에 대한 적대와 세속적 타락"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진 후 사형이 집행됐다. 이들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7 월 7 일 또 다른 남성 5 명이 아와즈 아랍인을 대표한 활동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1 년 초, 2005 년 4 월에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시위 6 주년을 바로 앞두고 체포됐다. 이들 중 교사인 하셈 샤바니 아무리와 하디 라시디는 이전 이란의 국영 영어 방송국인 프레스 TV 에 출연해 그들의 혐의를 "자백"했다. 이들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모하메드 알리 아무리는 2005 년 시위 당시 시위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당국의 수색을 받아왔다.[54]

2012 년 2 월 말 이란 사면선처위원회는 페르시아 문학 교사이자 대학 강사, 전 노동조합 활동가로 2009 년 반정부시위 이후 체포됐던 압돌레자 간바리의 사면 요청을 기각했다. 그는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PMOI)로부터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2011 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압돌레자의 가족들은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는 이라크에 소재한 금지된 반정부단체로 이란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며 이란 정부에 대항하는 무장행동에 참여한 바 있다. "신에 대한 적대"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람들은 이라크의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 캠프에 거주하는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 회원의 가족들로, 캠프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란계 캐나다인인 하미드 갓세미 쉘은 한 해 동안 사형집행의 위험이 임박한 채로 보냈다. 그는 2008 년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와 협조하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는데, 이란군에서 기술 엔지니어로 일했던 형제인 알보르즈 갓세미 쉘로부터 군 기밀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2012 년 1 월 17 일, 이란 대법원은 이란계 캐나다 영주권자인 **사에드 말렉푸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웹 프로그래머인 그는 자신이 제작한 사진 업로드 프로그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포르노 이미지를 올리는 데 사용된 후 "이슬람을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2010 년 사형을 선고 받았다. 사에드는 2008 년 10 월 이란에 가족을 만나러 왔다가 체포됐다. 사에드 말렉푸르의 사형 선고는 사에드가 그의 행동을 "뉘우쳤다"고 호소한 후 12 월로 연기되었다.

다른 블로거 **바히드 아스가리**와 웹사이트 관리자 **아흐마드 레자 하셈포르** 2 명은 온라인 활동에 관해 사형을 선고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55]

2011 년 형법상 존재하지 않는 "이슬람 배교"죄로 교수형을 선고 받은 기독교 목사 유세프 나다르카니는 재심을 받고 2012 년 9 월 마침내 3 년에 가까운 구금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는 크리스마스인 12 월 25 일 의도적 다시 체포됐으나, 2013 년 초 다시 석방됐다.

5 월에는 남성 4 명이 "남색"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 월 이란 정부가 2006 년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에게 "간통" 혐의로 선고했던 투석형을 더 이상 시행할 계획이 없어 아시티아니가 풀려날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아시티아니의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여전히 남아있는지의 여부 등 그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아시티아니의 투석형 선고는 이미 이란 형 집행부(Offi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es)로 보내졌으므로, 투석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0 년에 체포된 아시티아니의 전 변호인 자비드 후탄 키얀은 아시티아니를 변호한 혐의로 최소 징역 4 년과 변호사 자격 정지 5 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 월 이란 국회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헌법수호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연내 발효되지는 못했다. 투석형을 명시하는 조항은 2012 년 삭제되었다(그러나 2013 년 초 다시 채택됨). 혼외 성관계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된다. 개정 형법 초안에 따르면 판사는 해당하는 성문법이 없는 사건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라 판결하도록 하는 이란 헌법 제 167 조 등에 따라 여전히 투석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형법은 또한 주관적인 "판사의 지식"*(엘름-에 카지)*을 바탕으로 사건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키에 모하마디 아시티아니의 유죄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외에도 마약 밀매와 같은 일부 범죄의 경우 미성년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살인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란의 재판 절차에는 전반적으로 결함이 존재한다. 이란에서 내려진 사형선고 중 많은 수는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소위 "자백"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 나온 것이다. "자백"을 TV 로 방송하는 것은 재판 중 구금된 피고인을 유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당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백"을 이후 철회하며, 자백을 하도록 강요 받거나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8 월 6 일, 이란 국영 TV 채널 IRTV1 은 "테러 클럽"이라는 39 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이라크에 소재한 영화 및 TV 제작사의 설립자인 **마쟈르 에브라히미**와 함께 이란 핵과학자와 연구자 5 명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11 명의 남성과 여성이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들 중 일부 또는 전원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사람 중 한 명인 **마지드 자말리 파시**는 2011 년 TV 를 통한 "자백" 방송 후 5 월 15 일에 이미 사형이 집행됐다.

이란 형사절차법상 피고측 변호인은 공식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충분히 변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식 기소까지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즉 변호사나 가족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수 개월 동안 구금되기도 한다. 국선 변호사들은 첫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심지어 몇 시간 전에 할당되는 탓에 피고인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변호인에게 사형집행 48 시간 전에 연락을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형 집행을 항상 미리 고지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마지막으로 면회할 기회나 사형집행 후 피고인의 시신과 소지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사형 집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형수들이 감방에서 나와 테헤란 에빈 교도소와 같은 장소로 이동될 때만이 유일하다고 한다. (주로 예정된 사형집행 전 48 시간 사이에 이루어진다.) 사형수의 가족들은 종종 사형집행 불과 하루 전에야 마지막 면회를 위해 교도소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가족들은 사형수가 체중이 상당히 감소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울증과 기억 상실을 겪었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문의 대상이 되었다고 전하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당대우로 태형, 심각한 구타, 눈 가리기, 끓는 물 붓기, 강간 위협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6 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정재판과 영사 지원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이란인을 사형에 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이란 언론은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시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중세 수준의 행위"라는 표제를 달았다.[56]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는 극명한 증가를 보였다. 이라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한 나라가 되었으며, 2011 년 대비 사형집행 증가폭도 가장 컸다. 최소 129 명이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2011 년 총 최소 68 명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두 배나 증가했으며 2005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형수는 주로 집단으로 사형에 처해져, 하루 최대 34 명까지 사형이 집행됐다. 최소 여성 5 명이 처형됐고, 최소 2 명의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총 최소 81 건의 사형 선고 기록을 입수했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매년 250 건에서 600 건 사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살인에 대한 것이었다. 사형 선고는 모두 자동적으로 이라크 파기법원의 검토를 받은 뒤,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백 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 허가를 받고 복역 중이며,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형이 집행될 수 있다.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 비서이자 경호원 아비드 하미드 마흐무드는 6 월 7 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타리크 아지즈 전 외무장관 및 부총리, 사둔 샤키르 전 내무장관과 함께 2010 년 이라크 최고형사법원으로부터 사형이 선고됐다. 3 명은 모두 사담 후세인 밑에서 정치활동가 탄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타리크 아지즈와 사둔 샤키르는 금방이라도 사형이 집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12 월 16 일 현재 터키에 망명 중인 타렉 알 하셰미 이라크 부통령은 사위 아흐메드 콰탄과 함께 무기 소지 및 사용으로 공석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것으로 이들은 테러 관련 범죄로 사형이 부과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2 년 각각 다섯 번째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재판 중에는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통해 받은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는 등 공정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들은 구금 중 전선 케이블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손, 손목, 손가락, 발목, 발 등에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바닥에 물을 쏟은 뒤 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방에 들어가 있게 하는 등 조직적인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백" 내용을 공식적으로는 기각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때 증거의 일부로써 계속 포함시켰다. 일부 이라크 TV 방송국은 이렇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방송했다.

나반 아델 함디, 무아드 무하마드 아베드, 아메르 아흐마드 카사르, 샤키르 마흐무드 아나드 등 이라크 남성 4 명은 무장단체에 소속되고 테러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서부 이라크 안바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끝에 12 월 3 일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체포된 뒤 안바 지방 중심도시인 라마디의 범죄방지부에 수주간 외부의 접촉 없이 구금돼 있으면서 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들의 "자백"은 안바의 지역 TV 채널인 알 안바에서 4 월 24 일과 25 일 방송되었다. 재판을 받을 때, 4 명은 안바 형사법원에 고문으로 인해 "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말했다. 함께 구금돼 있던 사람들의 증언과 이들의 상처를 찍은 사진이 그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에 대한 의료 검진 결과 한 명에게서는 고문에 따른 화상과 기타 부상 역시 드러났다. 이들의 고문 주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

요르단에서는 최소 16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살인에 대한 것이었다. 6 월 16 일과 17 일에는 암만에서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총회가 개최됐다.

쿠웨이트에서는 최소 9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살인 혐의였으며 여성도 한 명 포함됐다. 그 중 2 건의 경우, 자신의 집에 고용한 네팔,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쿠웨이트인 2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6 월 셰이크 사바 알 아흐메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국회를 통과한 "신성모독죄"를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이 법률 초안은 마이크로-블로그 (micro-blogging) 사이트인 트위터에 이슬람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의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쿠웨이트의 소수 시아파 소속인 하마드 알 나키가 3 월 27 일 체포된 후 제출된 것이다. 알 나키는 6 월 징역 10 년 형에 처해졌다.

레바논에서는 8 년 연속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에서 최소 9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 중 7 건은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2 건은 살인 관련 범죄에 대한 것이었다. 5 명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12 월 제출된 국가인권행동계획안은 모든 레바논 관련법에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리비아에서는 법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기록은 없었다. 리비아의 사법제도는 2012 년 다시 시행되어 최소 5 건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11 월 벵가지의 한 군사법원은 2011 년 무력분쟁 당시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는 민간인 살인과 강간 혐의로 5 명의 전 정부군 병사에 대해 열린 공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6 월 알 바그다디 알 마흐무디 전 리비아 총리는 *농르폴망 원칙*(중대한 인권 침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망명자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튀니지로부터 리비아로 인도됐다. 9 월에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 대령의 전 군사정보부장인 압둘라 알 세너시가 모리타니아로부터 리비아로 인도됐다. 두 사람 모두 불공정재판과 사형에 처해질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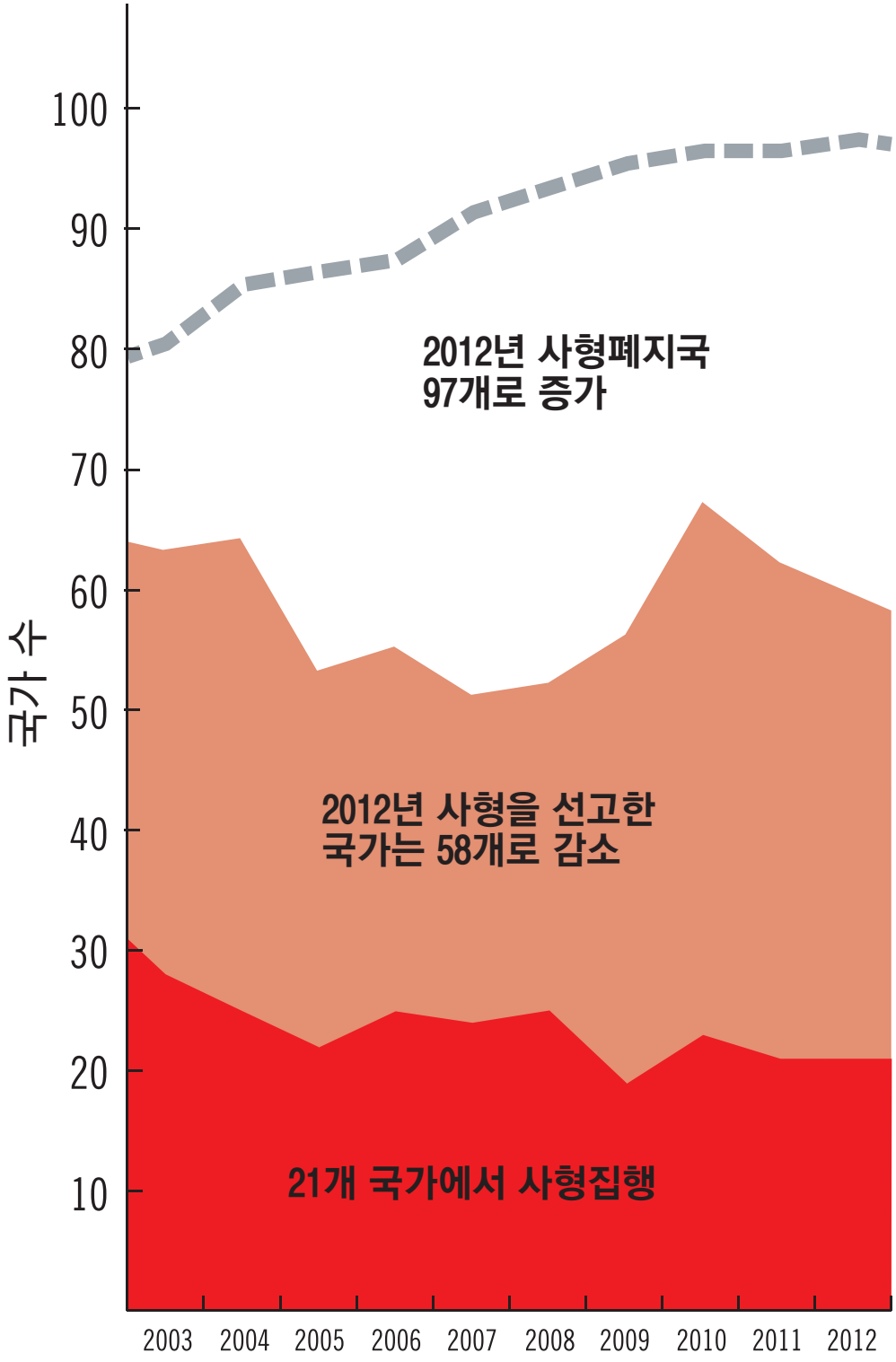
모로코/서사하라에서는 최소 7 건의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3 월 9 일, 항소법원은 2011 년 4 월 마라케슈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2011 년 10 월 유죄 판결을 받은 아딜 알 아트마니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하고, 공범인 하킴 다하의 종신형을 사형으로 가중시켰다. 4 월 사데딘 엘 오스마니 외무장관은 테러 관련 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모로코인 수감자들의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아랍 사법공조협정의 일환으로 이들의 남은 형기를 모로코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국회에 알렸다.

5 월 진행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모로코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법률 초안이 계류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사형폐지를 향해 더 나아갈 것을 고려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였지만, 즉각적인 사형제도 폐지는 거부했다. 라바트에서는 모로코의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사형제도에 관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대회가 10 월 18 일부터 20 일까지 개최됐다.

오만에서는 사형 선고나 집행이 없었다고 보고됐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12 월, 오만은 사형제도에 관한 모라토리엄 수립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 이전의 기권에서 입장을 바꿔 반대에 투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사법권 내에서는 2011 년보다 2 배 증가한 6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총 사형선고는 최소 6 건 이루어졌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서안지구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보안군 1 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는 형이 집행되기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2005 년 마흐무드 압바스가 취임한 이후 한

2003-2012
사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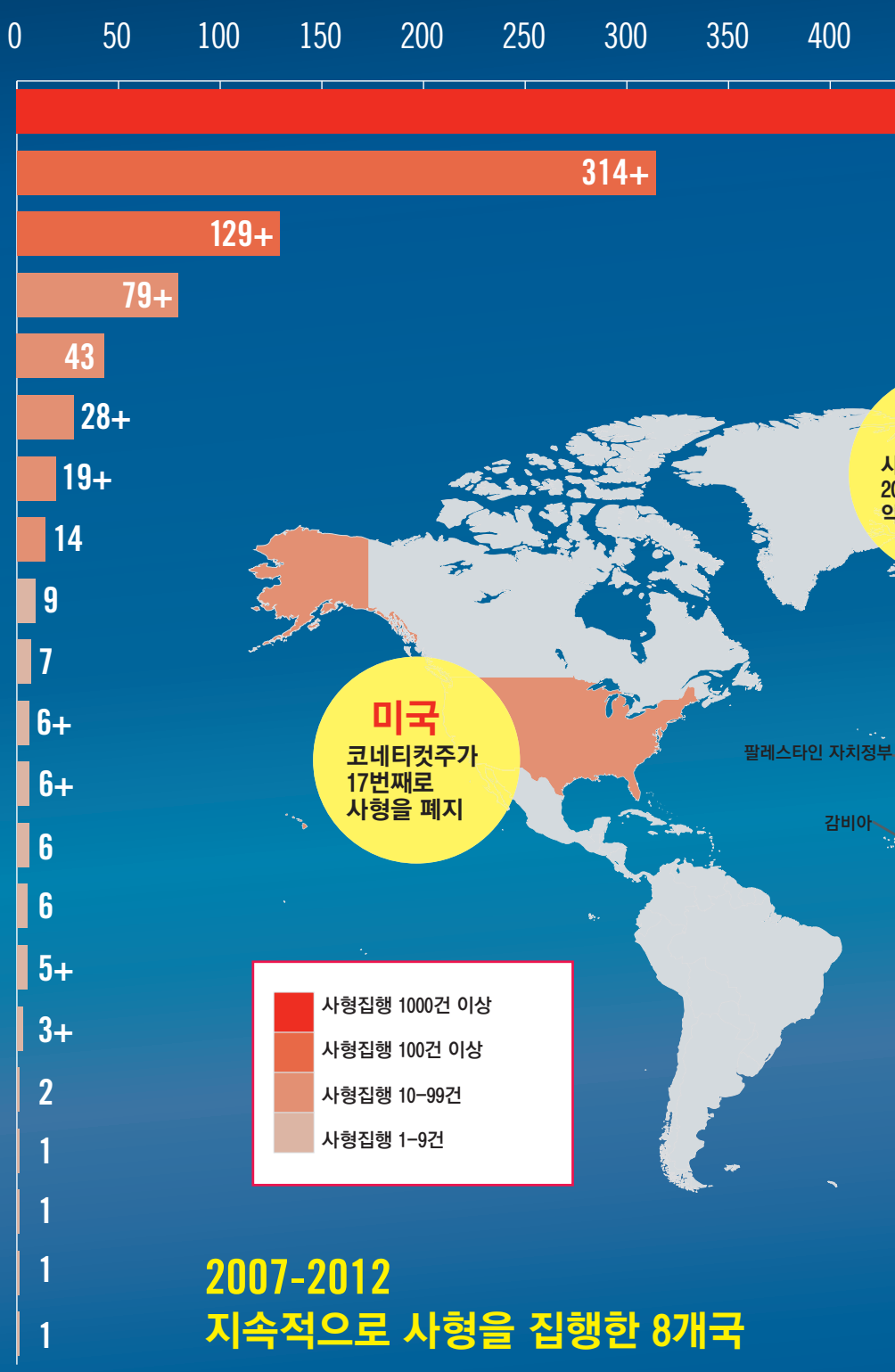


라트비아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면서 97번째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2003년 80개 국가만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총 140개 국가에서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2012년 58개국에서 최소 1,72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수치는 2011년 63개국에서 최소 1,923명이 사형 선고 받은 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2년 연속 낮아지고 있다(2010년 67개국에서 2,02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21개국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이루어졌을 사형집행을 또한 제외할 수 없다. 이 그래프는 2003년 28개 국가가 사형을 집행했으나, 10년이 흐른 지금 사형집행 국가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2012 사형집행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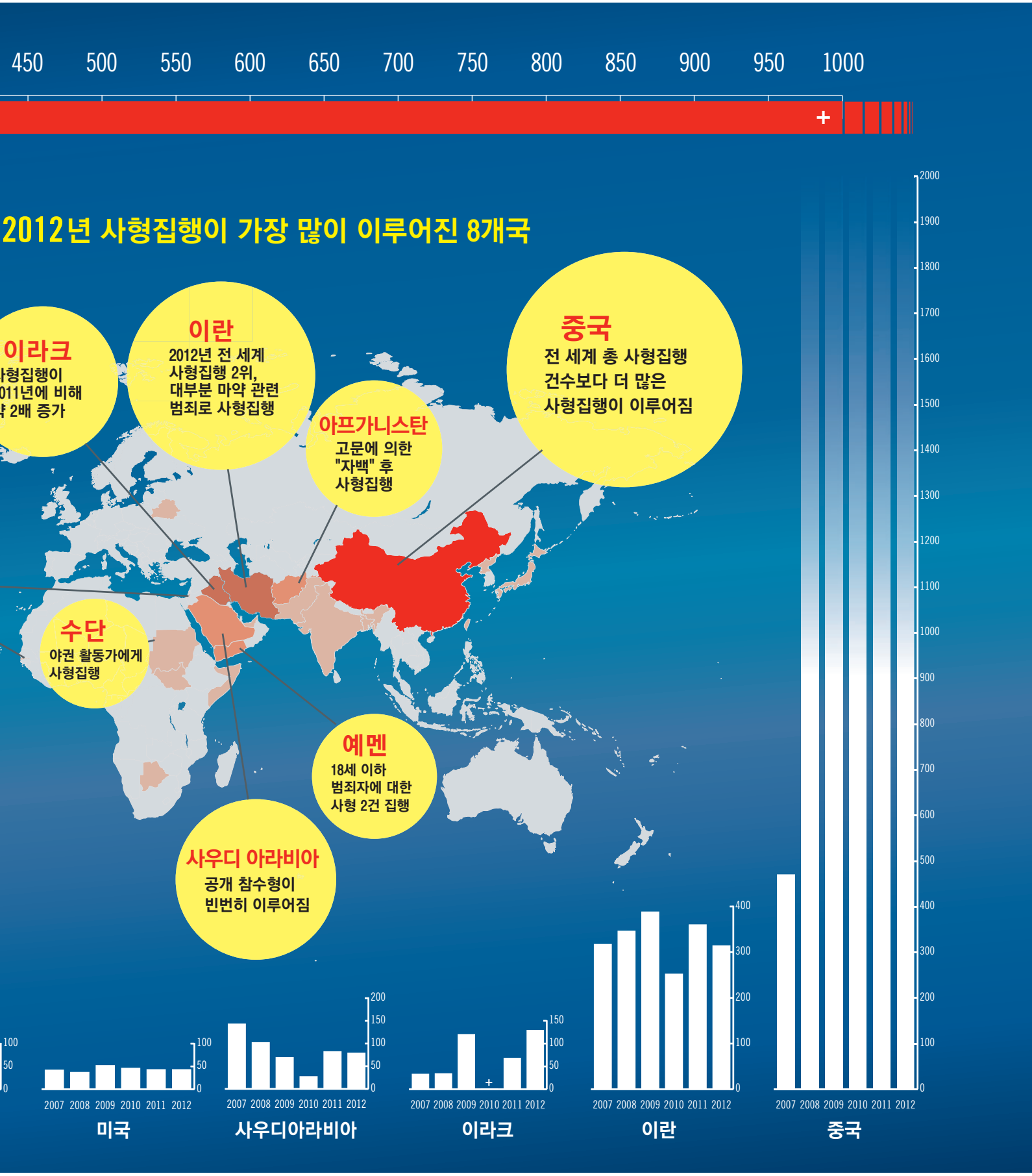


국가 명칭 뒤에 숫자와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숫자가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한 건 이상) 사형을 선고 또는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다.

이 지도는 경계와 관할권에 대한 일반적인 위치만을 표시할 뿐이며,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이루어졌을 사형집행 또한 제외할 수는 없다.

2007-2012 지속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8개국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2012년 사형집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8개국
이라크
사형집행이
011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이란
2012년 전 세계
사형집행 2위,
대부분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집행
아프가니스탄
고문에 의한
"자백" 후
사형집행
중국
전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보다 더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짐
수단
야권 활동가에게
사형집행
예멘
18세 이하
범죄자에 대한
사형 2건 집행
사우디 아라비아
공개 참수형이
빈번히 이루어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중국

2012년 전 세계 현황

0 바레인, 싱가폴, 베트남 단 한 건의 처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에라리온 **0** 에는 사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라트비아를 포함해 **97** 개 국가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베냉 과 몽골이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 의정서 (ICCPR)를 가입했고 마다가스카르가 서명했다.

111 개 유엔 회원국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찬성했다.

43 미국에서 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을 폐지한 주가 17개로 증가했음에도 사형건수는 2011년과 같았다.

가나는 새 헌법에 사형폐지 권고를 수용했다.

2012년 사형집행방법에는 참수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형, 총살형 등이었다.

11 개 국가가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9 개 국가가 계속해서 의무적 사형선고를 운용했다.

벨라루스는 여전히 유럽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한 사형집행국이다.

방글라데시와 케냐에서 선고를 내리는 범죄의 종류가 늘어났다.

보츠와나, 감비아, 인도, 일본, 파키스탄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형집행의 **99**%를 차지한다.

8 개 국가에서는 고문 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로 "자백"을 받은 뒤,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감비아(8월)에서 하루 만에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2013년 4월 문서번호: ACT 50/001/2013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에서는 4 월과 7 월 각 3 명, 총 6 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5 명은 살인 외 기타 범죄에 대해, 1 명은 반역과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명은 이스라엘군과 "협력" 했다는 혐의로 각 1 월과 9 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군사법원의 심리 절차와 강요된 "자백"의 활용 등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0 년부터 하마스 정부가 사형에 처한 사람은 최소 14 명에 이른다.

카타르는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리랑카 남성의 살인 혐의로 최소 1 건의 사형을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사형집행 건수가 많은 나라다. 최소 79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1 년의 82 건과 거의 유사할 만큼 높은 수치다. 살인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지만, 최소 29 명은 사형제도 적용에 관한 국제기준상 "가장 중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치명적이지 않은 범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여기에는 간통, 무장강도, 빈집털이, 마약 밀수, 범죄단 조직, 절도, 납치, 강간, "마술", "마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12 년에 마약관련 범죄로 처형당한 수는 최소 22 명으로 2011 년에 3 명, 2010 년에 사형 집행된 총 27 명 중에서 1 건 만이 마약관련 범죄에 관한 집행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형 집행은 보통 공개되어 참수형으로 이루어졌다. 형이 집행된 시신은 이름 없는 묘지에 매장하기 위해 이동된다. 2012 년에 십자가형이 최소 1 건 있었다. 수단 남성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십자가형은 참수된 머리를 시신에 다시 꿰매 붙이고 이후 공공장소에 세워진 장대에 매달아 놓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소 10 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했지만, 실제 사형 선고 건수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문화된 형법 없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12 월 22 일 제다의 한 법원에서는 라이프 바다위의 배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온라인 활동가인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나누기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바다위를 기소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내에서 공개적인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보인다.[57] 하디 알 무티프는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한 혐의로 1994 년 수감된 이후 왕실 사면으로 2 월 10 일 석방되었다. 알 무티프는 원래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후 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재판 절차는 국제 공정재판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공식적인 변호가 거의 허락되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 절차가 이루어져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한번에 수주씩 독방에 수감되기도 하고, 전적으로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 혹은 속임수를 통해 받은 "자백"에만 의존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 사형 선고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만 형이 집행될 수 있다.

힘 없는 개인을 차별하는 충격적인 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두드러진다. 2012 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 27 명이 외국인이었다.[58] 지난 5 년간 평균적으로 처형된 사형수 10 명 중 3 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온 이주노동자였다.

인도네시아인이자 2 명의 자녀를 둔 **시티 자이납 빈티 두흐리 루파**는 1999 년부터 메디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현재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시티 자이납 빈티 두르리 루파는 1999 년 11 월 여성 고용인을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했다. 심문 중 고용인을 살해한 이유가 "학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경찰 조사 중 인도네시아 영사와 접촉하지도 못했다. 경찰은 조사 당시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시티 자이납 빈티 두흐리 루파는 체포되기 전, 고용인과 그 아들이 자기를 잔혹하게 대했다는 내용의 편지들을 보냈다.

현재 **시리아**의 상황으로 인해 사형 집행이나 선고에 대해 확인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2011 년 3 월부터 계속된 개혁 요구 시위는 2012 년 정부와 반대파 간의 내부 무장 분쟁으로 번져 양쪽에 더욱 만연한 폭력사태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59] 일부 한정된 정보가 입수되기는 했지만,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지, 또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10 월 23 일,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당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 일반 사면을 단행했지만 "테러 범죄", 무기 밀수 및 마약 밀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사형수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2011 년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았던 **튀니지** 법원은 2012 년 사형제도 운용을 재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9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모두 살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1 월 몬세프 마르주키 임시 대통령은 사형수 122 명을 종신형으로 감형시켰는데,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복역 중이던 모든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 중인 지네 알 아비디네 벤 알리 전 대통령은 6 월 열린 공석 재판에서 2011 년 반정부시위 당시 시위대 살인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9 월 19 일 이루어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튀니지는 현재 제헌 국민의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 의지가 존중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거부했다. 8 월 발의되는 새 헌법 초안에는 생명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법을 참조하여 암묵적으로 사형 제도를 허가하고 있다. 튀니지 형법은 여전히 21 개 범죄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일으키지 않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11 년과 마찬가지로 1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스리랑카인 알렉스 로하나에 대한 사형이 12 월 6 일 아침 집행됐다. 로하나는 2002 년 피해자의 집에서 다툼 끝에 아랍에미리트인 기술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부다비를 비롯한 토후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려면 대법원의 확인을 받고 토후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0] 사형집행은 총살형으로 이루어진다. 최소 21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그 중 최소 6 명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 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는 살인, 강간 [61], 경찰 2 명에 대한 총기 발사 및 상해 등이었다. 사형 선고의 절반 이상은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려졌으며, 1 건은 공석 재판에서 이루어졌다.

11 월 20 일 안와르 모하메드 가르가쉬 외무장관은 만장일치의 판결에 의해서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내려진 모든 사형 선고는 자동적으로 항소의 대상이 된다.

예멘에서는 최소 28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 년에 41 명,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0 년에는 62 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은 보통 총살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사형집행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히 심장에 총을 발사하는 방법이다. 야당인 이슬라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샤이크 칼리드 나샬과 압두 무하마드 나샬은 이들에 대한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 월 31 일 사형이 집행됐다.

최소 7 건의 사형 선고가 새로 내려졌지만, 실제 사형 선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은 살인죄였지만, 마약 범죄와 같이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기혼자가 합의 하에 이성간 및 동성간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그 상대가 배우자가

아닐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며, 외국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4 월 최소 1 건의 경우에서 예멘 대법원은 이란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남부 예멘의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과 관련해 내려진 판결이었다. 6 월에는 2011 년 2 월 시위대 1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던 타이즈 시위에서 벌어진 수류탄 공격과 관련해 남성 3 명이 공석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12 년에 사형이 집행된 2 명은 미성년 범죄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예멘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음에도, 혐의가 되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피고인의 실제 나이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푸아드 아흐메드 알리 압둘라는 2004 년 그가 18 세 이하일 때 저질렀다는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1 월 18 일 타이즈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힌드 알 바라티는 7 년 전 소녀 1 명을 살해한 혐의로 12 월 3 일 사형이 집행됐는데, 범행 당시 그는 15 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5 명의 미성년 범죄자들이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 이 중 모하마드 압두 카심 알 타윌, 무하마드 압둘 와합 파이살 알 카셈, 무하메드 타헤르 사벳 사뭄, 왈리드 하이칼 등 최소 4 명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의 위협에 놓여 있었다. 18 세 이하일 때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약 180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6 월 예멘 법무부는 미성년 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 특히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피고인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독립적인 의료검진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지위와 관할권이 없어 설립 6 개월 만에 기능이 중지됐다.

3 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예멘 사형 관련 법안에서 동성애 처벌,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합법적 투석형, 모든 사형수에게 사면을 요청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 등의 다양한 방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6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사형폐지 관련 발전 사항을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사형폐지를 향한 흐름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월 5 일 베냉은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의 75 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마다가스카 역시 9 월 24 일 서명했다. 가나 정부는 새 헌법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12 년 말 현재 시에라리온에는 사형수가 없다. 베냉과 부르키나파소, 말라위, 시에라리온은 2011 년과 달리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5 개국에서 최소 40 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소말리아 (6+; 과도연방정부(TFG): 5+, 푼틀랜드: 1+), 남수단 (5+), 수단 (19+)에서 법적 사형 집행이 계속됐으며 보츠와나 (2)와 감비아 (9) 에서도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10 월에도 주지사가 2 건의 사형집행영장에 승인하면서 사형집행이 재개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해는 2006 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지역에서 보츠와나 (5), 차드 (2), 콩고민주공화국 (11+), 적도기니 (1), 감비아 (5+), 가나 (27), 기니 (2+), 케냐 (21+), 라이베리아 (4+), 말리 (10+), 모리타니아 (6+), 나이지리아 (56), 소말리아 (76+; 과도연방정부: 51+, 푼틀랜드: 7+, 소말리랜드: 18+), 남수단 (+), 수단 (199+),

스와질란드 (1), 탄자니아 (3), 잠비아 (7+), 짐바브웨 (11+) 등 19 개국이 최소 449 건의 사형선고를 내린 것으로 기록했다.

확인된 사형선고 건수가 2011 년 254 건에 비해 2012 년에 증가했는데, 주로 수단에서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국가의 수는 2011 년 25 개국이었던 데 비해 하락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소말리아에서는 여전히 군사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공석 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베냉**에서는 2 년 연속으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12 월 17 일 베냉 국회는 형사소송법의 사형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베냉이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전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게 됐다는 헌법재판소의 8 월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국내법상 남아 있는 모든 사형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2013 년 국회 안건에 포함되었다.

2011 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보츠와나**에서는 남성 2 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5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지바니 사모는 살인 혐의로 1 월 13 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보츠와나 정부는 시신을 가족들에 인도하지 않았고, 매장된 장소도 알리지 않았다. 가탈로사망 가보아켈웨는 2 월 항소에서 패소했다. 그는 2012 년 말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요청했던 항소는 기각됐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012 년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크 마크 크리스티안 카보레 국회의장은 국제앰네스티에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 최종 비준을 위해 힘쓰겠다고 거듭 전했지만 법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카메룬**에서는 2012년에 들어 사형수가 102명이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인권자유위원회는 11월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차드**에서 2명이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최소 11 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5 월 30 일 남부 키부의 군사법원에서는 4 월 콩고 동부에서 일어난 폭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에릭 은가보와 사담 "링고" 등 군 장교 2 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월 31 일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삼브웨 므왐바 장관이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포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동부지역의 폭력 사태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적도기니에서 사형이 1 건 선고되었다. 5 월 7 일, 말리 국적의 20 세 아만두 탐부라는 바타 시에 위치한 주 법원에서 여성 1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구금을 구형했다. 아만두 탐부라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에리트레아의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정보는 입수하기 매우 어려웠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았고, 정부는 대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사형 집행이나 사형 선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불법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에티오피아는 2 년 연속 사형 선고가 기록되지 않았다. 한 해 동안 기자들과 야당 인사들은 확대된 2009 반테러법에 의해 정부 비판, 개혁 요구, 시위 및 체포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기자인 에스킨더 네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7 월 13 일

대역죄와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8 년이 선고됐다.

8 월 **감비아**에서 9 건의 사형이 집행되면서 거의 30 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최소 5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불공정하거나 정치적인 동기로 진행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최소 36 명의 사형수들은 즉시 형이 집행될 위험 속에 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감비아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사형존치국으로 재분류했다.

8 월 19 일과 20 일, 이슬람 축제인 이드 알피트르(Eid-al-Fitr)를 기념하는 TV 연설에서 야흐야 자메 감비아 대통령은 9 월 중순까지 현재 내려진 모든 사형 선고를 "정확히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8 월 23 일 저녁, 남성 8 명과 여성 1 명은 수도 반줄 근교의 마일 2 교도소에서 끌려 나온 후 바로 총살형을 당했다. 이들 중 2 명은 세네갈인이었다고 알려졌다.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사형수나 그 가족 및 변호인도 미리 알지 못했다. 사형수 가족들은 사형집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날로부터 3 일이 지난 후인 8 월 27 일에야 가족의 생사에 대한 공식 확인을 받았다. 감비아 정부는 시신을 가족들에 인도하지 않았으며, 매장된 곳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 9 명 중 **말랑 손코, 타바라 삼바, 부바 야르보에** 등 3 명은 아직 항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감비아 헌법은 모든 사형수에게 대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9 월 14 일, 자메 대통령은 사형집행에 대한 "조건부"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는데, 이는 범죄율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철회"된다.

12 월 3 일 체포된 **이맘 바바 레이**는 기소 없이 독방에 구금됐다. 이맘 바바 레이는 8 월에 이루어진 사형집행에 대해 "이슬람답지 않다"고 강력히 비난했으며, 시신을 가족들에 인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체포되기 전 그는 설교를 통해 정부 비판과 사형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감비아 헌법 제 18 항에서 헌법이 발효되는 1997 년 1 월부터 10 년 이내에 사형폐지를 검토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 검토는 5 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 18 항은 또한 사형을 "타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범죄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감비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살인죄에는 사형이 의무적이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을 때도 반역죄 등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10 월 19 일 감비아 대법원은 자메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해 무기와 장비, 용병 등을 입수한 데 대해 2010 년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8 명 중 7 명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나**에서는 27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모두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이 대상이었다.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남성 162 명과 여성 4 명이다.

6 월 가나 정부는 새 헌법에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라는 헌법재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 위원회 보고서의 백서에서 가나 정부는 사형폐지의 이유로 "생명의 존엄성은 가나 사회의 정신에 뿌리 깊이 새겨진 가치이므로 사법적 불확실성의 도박에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10 월 유엔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가나는 이 같은 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0 월 대법원 판사 지명 후보자 앤소니 알프레드 베네는 특히 결백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위험에 대해 언급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기니에서는 서로 다른 살인사건에 대해 최소 2 건의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케냐에서는 최소 21 건의 새로운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동안 최소 8 명에게 강도 및 폭력 사태에 관련된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지만 고의적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 12 월 어에서 행정경찰관 6 명이 2010 년 카왕웨어에서 택시기사 7 명을 발포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의무적인 처벌로 사형을 계속 적용한 것으로 보였다. 케냐에는 더 이상 교수형 집행인이 없다.

8 월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케냐방위군법을 승인하면서 사형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장됐다. 이 법은 케냐 방위군이 반역, 간첩 행위, 적군 원조 행위, 적군에 중요 정보 지원 및 정권 교체에 관한 불법 지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총 1,582 명의 사형수가 여전히 사형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폭력을 동반한 강도 등 자유권규약 제 6 조 제 2 항이 정의하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케냐 정부에 사형제도 존치에 관한 국민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인식 증진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라고 제안했다.[63]

라이베리아는 최소 4 건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의무에는 라이베리아 사법권 내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는 것을 포함한다. 라이베리아는 2005 년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에 가입했지만, 2008 년 사형을 재개했다. 헌법 제 20 조 역시 사형을 명확하게 허용하고 있다.

말라위에서는 1992 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29 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1 월 **말리** 북부에서 시작된 무력 갈등이 계기가 되어 3 월 수도 바마코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64] 이 때문에 4 월 말리가 사실상 분단되게 되었다. 사형폐지를 향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소 10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2011 년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말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치르 시몬은 1 월 모국인 튀니지로 인도되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최소 6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 중 3 건은 테러 관련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5 월 15 일 항소법원은 2011 년 3 월 모하메드 압델라히 오울드 아흐메드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IM) 소속으로 알려진 그는 2009 년 누악쇼트에서 미국인을 총으로 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이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6 년으로, 당시 최소 7 명이 북부 나이지리아의 카노주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 년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56 명이며, 2012 년 말 현재 사형수는 1,002 명이다. 사형수 중에는 1999 년 나이지리아가 민주주의로 전환되기 전, 항소할 권리도 없이 군사법정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많았으며, 미성년 범죄자도 최대 20 명에 이른다.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은 19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연방 법무부와 법무장관은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시행중인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표현했다.

살인뿐만 아니라 무장 강도나 반역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8 월 크로스리버주 관계자들은 사법행정에 관해 진행 중인 검토의 일환으로 사형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고스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비정부단체인 법률보호원조프로젝트(LEDAP)가 2010 년 제기한 소송에서 모든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던 연방고등법원의 4 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가 진행 중에 있다.[65] 9 월 말 라고스주 고등법원은 법률보호원조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법률 컨소시엄이 2008 년 제기한 사건에서 사형제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한 교수형이나 총살형은 1999 년 헌법 제 34 항 a 절에 명시된 사형수의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와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사는 라고스주가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2010 년 법률보호원조프로젝트가 법조계 종사자 30,000 명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한 전국적인 설문조사 결과 수감자들과 일반 대중들 중 약간의 다수(51%)가 사형제도 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로 종교적인 이유에서였다.[66]

10 월 초 남서부에 위치한 에도주의 주지사는 1996 년 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수형이 선고된 2 명에 대한 사형집행 영장을 승인했다. 이들의 사형 집행은 항소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임에도 승인이 됐다. 알려진 바로는 교도소 측에서 주지사에게 베냉시 교도소의 사형수들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해당 교도소 수감자 일부가 탈옥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이와 같이 전한 것이다. 주지사가 사형집행 영장에 승인을 하고 나면 나이지리아 교도소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2012 년 말 현재까지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시에라리온에서 4 월 독립기념일 때 사면이 단행됨에 따라 2012 년 말 기준 사형수는 없다. 9 월에는 2003 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이 선고된 한 남성에 대해 항소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1 년 종신형으로 감형되기 전까지 사형수로 8 년을 보냈다. 2012 년에 새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반역과 특수강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으며, 살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형이 부과되고 있다.

10 월 10 일 세계사형반대의 날,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비정부단체인 "핸즈오프케인(Hands Off Cain)"으로부터 "2012 올해의 사형폐지론자" 상을 수상했다. 코로마 대통령은 수락 연설에서 "시에라리온 국민은 정부요원이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처형했던 날의 기억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1992 년 24 명, 1998 년 29 명이 처형당한 사건). 시에라리온인들은 국가가 허락한 사형집행을 또 다시 반복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말리아에서는 최소 6 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사형이 선고된 총 사람 수는 최소 76 명이었다.[67] 연방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모가디슈에서 4 건의 사형 집행과 51 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자체 감시 결과 최소 5 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났다. 1 월과 6 월, 과도연방정부군 병사 각 1 명과 4 명은 민간인과 동료 병사들을 살해한 혐의로 과도연방정부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중앙경찰서 구내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8 월 소말리아의 "과도기"가 끝나고 새롭게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들어섰다. 새 헌법은 8 월 승인됐다.

소말리아 북부의 준자치지역인 푼틀랜드에서 최소 1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최소 7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6 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사형을 선고 받고 카르도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10 월 23 일 한 군사법원은 예멘에서 무기와 폭발물을 배에 은닉하고 푼틀랜드로 들어온 예멘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자칭 소말리랜드 공화국에서는 병사 및 민간인 살해 혐의로 18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됐다.

독립국으로 유엔 회원국이 된 지 2 년 만에 **남수단**은 법률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는데도 사형제도 운용을 유지했다. 최소 5 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8 월 28 일 주바 교도소에서 2 명이 교수형에 처해진 뒤, 9 월 6 일 와우 교도소에서 남은 3 명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200 명 이상의 사형수들은 비좁고 더러운 감방에 족쇄를 찬 채 있다. 대다수의 사형수들은 불과 몇 분간 진행되는 재판에서 변호사의 변호도 받지 못했다. 남수단법상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해 대법원이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

9 월 26 일 리엑 푸옥 리엑 남수단 제네바 대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남수단은… 사형폐지 논리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접근 가능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남수단 대변인은 11 월 현행 사형 관련법은 2011 과도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진행중인 헌법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검토할 것임을 확인했다.

수단에서는 최소 19 건의 사형 집행과 최소 199 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됐다. 인티사르 샤리프 압달라, 라일라 이브라힘 이사 주물 등 여성 2 명은 각각 5 월과 7 월에 "간통" 혐의로 투석형이 선고됐다. 두 사건 모두 강요된 자백을 포함해 불공정한 재판을 치른 후 형이 선고됐다. 투석형 선고는 이후 항소를 통해 번복되어, 두 여성은 풀려났다.

수단 정부는 정치적 반대파의 활동가, 또는 활동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형제도와 2010 년 국가안보법의 광범위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수단 서부에 위치한 다르푸르의 무장 반정부단체 정의평등운동에 소속된 알 톰 하메드 투투는 국가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2011 년 교수형이 선고됐다. 수단 정부는 투투나 그의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해 소송 절차를 더욱 서둘렀다. 그의 사형집행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항소 결과를 기다리며 6 월로 연기되었다.

2011 년 6 월, 수단 남부 남코르도판 주에서 정부군과 북수단 인민해방운동(SPLM-N)의 군사단체인 북수단 인민해방군이 충돌하며 무장분쟁이 일어났다. 남코르도판의 누바족 출신이자 북수단 인민해방운동에 소속된 자릴라 카미스 코코는 교사이자 활동가이며, 남코르도판에서 집을 버리고 피난 온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자진해서 나섰다. 같은 달에 그는 유투브 동영상에 출연해 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상황을 맹렬히 비난하며 휴전을 촉구했다. 그는 2012 년 3 월 체포되어 기소도 되지 않은 채 남은 한 해를 구금된 상태로 보냈으며, 잠시 독방에 구금되기도 했다. 자릴라 카미스 코코는 12 월 13 일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중 두 가지인 "헌법제도 훼손"과 "국가에 대한 전쟁 도발"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다[68].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구금이 인도주의적 활동과 평화적 의견 표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스와질란드에서는 1 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05 년 헌법 제 15 조 제 2 항이 의무 사형선고를 금지하면서 사형 적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11 월 스와질란드 고등법원은 27 세 남성에게, 그의 잔인한 살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일부 정상 참작 요소로 봤다. 그러나 맥이니셀리 조모 시멜레인 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별개의 사건으로, 최고항소법원은 여성 34 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1 년 사형이 선고된 데이비드 시멜레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내법상 데이비드 시멜레인의 마지막 남은 구제 방안은 선처 탄원뿐이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의 지위가 확인되긴 했지만, 3 월 스와질란드는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탄자니아에서는 새로 3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1 월 20 일 다레스 살람 고등법원은 전 탄자니아 국민방어군(TPDF) 소속 3 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률인권센터(LHRC)에 따르면, 사형 선고는 살인, 반역, 군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부과된다.[69] 항소법원은 3 월 2 건의 살인으로 인한 사형선고를 확정했는데, 그 중 1 건은 2008 년 알비노 소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3 월 12 일 진행된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탄자니아 정부는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현재 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선언 권고 역시 "어떤 정책이든 시행하기 전에 내부 토론과 국민 여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거부했다. 그러나 법률인권센터가 1,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 중 4 분의 3 은 사형이 형벌로써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70]

우간다 대법원이 의무 사형선고가 불법이라고 선언한 2009 키굴라 판결 이후, **우간다**의 일부 판사들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징역 50 년형, 또는 60 년형과 같은 장기 징역형을 대신 선고했다. 우간다는 28 개의 민간 및 군사범죄에 대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다.

2월 성인이 합의 하에 동성간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종신형에 처하는 등 더욱 처벌이 강화된

"반동성애법"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2009년에 처음 제출됐던 반동성애법은 "동성애 악화"죄를 사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1월 이 법안의 발의자는 사형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국회법률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뒤에는 결국 이 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간다 국회는 국회법률위원회의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이외에 정치 지도자들이 사형 부과 대상으로 제기한 범죄로는 공무원의 공금 유용, 아동 성폭력 등이었다.

3 월 우간다 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선포와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포함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사형제도 폐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진 헌법 제정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해당 권고사항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잠비아에서 최소 7 건의 사형 선고가 부과됐는데 모두 살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잠비아 대법원은 2 건의 무장 강도 사건을 포함해 최소 3 건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7 월 카브웨의 무코베코 맥시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 300 명 중 64 명은 대법원의 항소 심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루사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이 스콧 잠비아 부통령은 교도소 방문 중에 1 인용 감방에 8 명을 수용하고 있는 사형수들의 수감 환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3 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잠비아 대법원이 1995 년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항소 심리를 17 년째 계류시키고 있어 자유권규약 제 6 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 파일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복역 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 역시 자유권규약 제 7 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71]. 10 월 진행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잠비아는 사형제도 폐지 또는 존치 여부를 현재 진행 중인 새 헌법 채택 과정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짐바브웨에서 최소 11 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모두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것이었다. 짐바브웨는 대법원에 대한 항소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8 월 오베르트 구투 법무장관은 "행정부는 더 이상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현재 사실상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 결국 사형수들에게는 종신형으로의 감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라고 말했다.[72] 그러나 9 월 짐바브웨 정부는 2005 년부터 공석이었던 국가 사형집행인의 자리가 채워졌다고 발표했다.

7 월 18 일, 사형제도에 관한 제한은 있지만 완전 폐지는 아닌 새 헌법의 두 번째 초안이 발표됐다. 새 헌법 초안의 제 4 항 제 5 절은 "참작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여전히 사형 선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지를 당시 21 세 이하였던 모든 남녀와 70 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사형을 의무적인 처벌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는 폭동 및 반역도 제외될 예정이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폭동 및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 초안상 법 조항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사형제도 운용을 상당히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사형폐지는 또한 짐바브웨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인 자유권규약 제 2 선택의정서 비준과 사형폐지 대책을 마련을 지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 헌법은 2013 년 국민투표에 부쳐질 계획이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는 4 월 "아프리카에서의 사형제도 문제 연구"를 발표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의정서" 채택을 권고했다.[73]

부록 I: 2012 년 보고된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본 보고서는 사법제도 내에서 사형제도가 운용된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 아래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대치이나, 일부 국가에서의 실제 수치는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일부 국가는 의도적으로 사형제도 관련 사법 절차를 은폐하고 있으며,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에 관한 통계를 기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예멘 (28+)과 같이 국가 명 뒤 숫자에 "+"가 붙는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사형선고 건수 (+)와 같이 국가 명 뒤에 숫자 없이 "+"가 붙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1 건 이상) 사형을 선고했거나 집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전세계 또는 지역별 통계를 취합한 경우, "+"는 2 로 계산되었다.

2012 보고된 사형집행 현황

중국 +

이란 314+

이라크 129+

사우디아라비아 79+

미국 43

예멘 28+

수단 19+

아프가니스탄 14

감비아 9

일본 7

북한 6+

소말리아 6+ (과도연방정부 5+, 푼틀랜드 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6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대만 6

남수단 5+

벨라루스 3+

보츠와나 2

방글라데시 1

인도 1

파키스탄 1

아랍에미리트 1

2012 년 보고된 사형선고 현황

중국 +

파키스탄 242

수단 199+

알제리 153+

태국 106+

이집트 91+

베트남 86+

이라크 81+

이란 79+

인도 78+

미국 77

소말리아 76 (과도연방정부 51; 푼틀랜드 7; 소말리랜드 18)

말레이시아 60+

나이지리아 56

방글라데시 45+

가나 27

케냐 21+

아랍에미리트 21+

미얀마 17+

요르단 16+

인도네시아 12+

콩고민주공화국 11+

짐바브웨 11+

말리 10+

사우디아라비아 10+

쿠웨이트 9+

레바논 9+

튀니지 9

모로코/서사하라 7+

스리랑카 7+

예멘 7+

잠비아 7+

대만 7

모리타니아 6+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6+ (5+ 가자지구 하마스 정부 ; 1 서안지구 자치정부)

감비아 5+

리비아 5+

트리니다드토바고 5+

보츠와나 5

가이아나 5

라이베리아 4+

일본 3

탄자니아 3

기니 2+

몰디브 2+

싱가포르 2+

바베이도스 2

차드 2

한국 2

카타르 1+

바레인 1

적도기니 1

스와질란드 1

아프가니스탄 +

라오스 +

몽골 +

북한 +

남수단 +

부록 II: 2012. 12. 31 현재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현황

전세계 3 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법적 ·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2012. 12. 31 현재 그 수는 다음과 같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7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8

사실상 사형폐지국: 35

법적 ·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총 합계: 140

사형존치국: 58

다음은 4 가지 범주(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사형존치국)에 속하는 국가 목록을 나열한 것이다.

1.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모든 범죄에 대해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바티칸시국,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코소보 포함),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토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2.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법률상 사형제도가 군법이나 예외적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등 예외적인 범죄에만 존재하는 국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페루

3. 사실상 사형폐지국

살인 등의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 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 혹은 관행을 수립한 국가

알제리, 베냉,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에리트레아, 가나, 그레나다, 케냐,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몽골,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74], 시에라리온, 한국,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란드,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잠비아

4. 사형존치국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보츠와나, 차드, 중국,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북한,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트남, 예멘, 짐바브웨

부록 III: 2012 년 12 월 현재 사형제도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 현황

국제사회는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 조약 4 개를 채택하고 있다. 1 개는 전지구적이며, 다른 3 개는 지역적 범위의 조약이다.

아래는 각 조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2012 년 12 월 31 일 현재 당사국 및 이들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현황이다. (국가는 가입이나 비준을 통해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국제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이후 비준을 통해 당사국이 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국가는 국제법상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의 조항을 존중하고, 서명한 조약의 목적과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1989 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국가적 조약이다. 이 의정서는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국이 비준이나 가입 시에 발효 유보를 통해 전시에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총 75 개국)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기니비사우, 폴란드, 상투메프린시페 (총 3 개국)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1990 년 미주기구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는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국이 가입 및 비준 당시 발효를 유보한 경우 전시에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총 13 개국)

유럽인권협약 제 6 의정서

1982 년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협약(유럽인권협약) 제 6 의정서는 평시의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전시 또는 즉각적인 전쟁 위협에 처한 경우"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총 46 개국)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러시아 (총 1 개국)

유럽인권협약 제 13 의정서

2002 년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모든 상황에서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협약(유럽인권협약) 제 13 의정서는 전시 또는 즉각적인 전쟁 위협에 처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당사국: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총 43 개국)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 아르메니아, 폴란드 (총 2 개국)

부록 IV: 2012. 12. 20 채택된 유엔총회 67/176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2012. 12. 20 채택된 유엔총회 67/176 결의안 공동 발의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마셜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동티모르, 터키,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총 91 개국)

찬성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마셜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총 111 개국)

반대

아프가니스탄,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 중국, 도미니카,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북한,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미국, 예멘, 짐바브웨 (총 41 개국)

기권

벨라루스, 카메룬, 코모로,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피지, 기니, 인도네시아,

요르단, 케냐,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몰디브, 모리타니아, 모로코/서사하라,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세네갈, 솔로몬제도, 한국, 스리랑카, 수리남, 탄자니아,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잠비아 (총 34 개국)

불참

앤티가바부다, 적도기니, 감비아, 가나, 키리바시,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총 7 개국)

미주

[1] 미 국립연구회의, "Deterrence and the Death Penalty", Daniel S. Nagin, John V. Pepper, 미 국립학술원 출판부 편집, 2012, p.2.

[2] Charles M. Harris, "Why Florida should abolish the death penalty," http://www.gainesville.com/article/20120418/OPINION/120419608?p=3&tc=pg (2013 년 3 월 8 일 접속).

[3] 국제앰네스티는 그 외 국가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사형집행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작년에 이어 보여진 감소 추세는 일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4] 시리아는 폭력을 동원한 시위 탄압으로 인해 회원 자격이 박탈됐다. 법적 사형집행과 사형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입수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2012 년 시리아에서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5] 무죄판결(exoneration)은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을 받은 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되면 법률상 죄가 없다고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6] 2011 년 20 개국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언급한 *2011 년 사형선고 및 사형현황(Index: ACT 50/001/2012)*보고서 발표 직후, 국제앰네스티는 싱가포르에서 4 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1 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1 개국이다.

[7]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안점령지구와 2007 년 7 월부터 하마스 정부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사법권 하에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8] 아프가니스탄, 말리 북부, 파키스탄, 소말리아에서 무장 반정부단체가 투석형으로 불법살해를 집행했다는 것이 보고됐다.

[9] 각국 정부는 나이가 논쟁이 될 경우 적절한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 신체적 및 정신적, 사회적 발달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나이를 가늠하는 좋은 예이다. 이 같은 기준은 논란이 된 사건에 피고인이 미성년으로 간주되어 사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처의 여지를 남기는 쪽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은 어린이에 관한 모든 행위는 어린이의 최대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아동권리조약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것이다.

[10] 인권이사회 19/37 결의안 "아동 인권", 2012 년 4 월 19 일 채택, UN document A/HRC/RES/19/37.

[11] 2003 년부터 쿠바가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2008 년 세인트키츠네비스가 1 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을 제외하면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주 지역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 건수 역시 지난 5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08 년 최소 125 건에서 2012 년 89 건으로 줄었다.

[12] "The Death Penalty in 2012: Year End Report, December 2012", 사형정보센터, http://deathpenaltyinfo.org/documents/2012YearEnd.pdf (2013 년 3 월 8 일 접속).

[13] "UN rights chief urges Barbados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and discrimination", 유엔 공보실, 2012 년 4 월 5 일,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1723#.UQT47rSWTFI (2013 년 3 월 8 일 접속).

[14] 자유권위원회, 과테말라에 대한 최종견해, UN document CCPR/C/GTM/CO/3, 2012 년 4 월 19 일..

[15]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12 년 말 현재 1 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16] "Death row inmates on hunger strike over bread and butter diet", *Guyana News*, 2012 년 8 월 1 일, http://www.guyananews.co/2012/08/01/death-row-inmates-on-hunger-strike-over-bread-and-butter-diet/ (2013 년 3 월 8 일 접속). 이안 창 수석재판관의 2013. 1. 16 판결로 강가 디올랄 외 사형수 5 명은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17] 가이아나 국회, Notice Paper No. 83 (M34 Govt 13), 2012 년 7 월 17 일 발행.

[18] "Law school raises concerns over Committal Proceedings Bill", *Jamaica Observer*, 2012 년 10 월 22 일, http://www.jamaicaobserver.com/news/Law-school-raises-concerns-over-Committal-Proceedings-Bill_12790110

(2013 년 3 월 8 일 접속).

[19] 동카리브 항소법원, Appeal HCRAP 2008/002, 2012 년 3 월 12 일 판결.

[20] 동카리브 대법원은 동카리브국가기구 회원국 내 최고법원이다.

[21] 추밀원, 개인청원 No 0107 /2010, *Nigel Brown v. the State*, [2012] UKPC 2, 2012 년 2 월 7 일 판결.

[22] 추밀원, 개인청원 No 0109 /2009, *Marcus Jason Daniel v. the State*, [2012] UKPC 15, 2012 년 5 월 23 일 판결.

[23] 추밀원, 개인청원 No 0113 /2009, *Deenish Benjamin and Deochan Ganga v. the State*, [2012] UKPC 8, 2012 년 3 월 13 일 판결; 추밀원, 개인청원 No 0002 /2012, *Taitt v. the State*, [2012] UKPC 38, 2012 년 11 월 8 일 판결.

[24] 사형정보센터, http://www.deathpenaltyinfo.org/innocence-list-those-freed-death-row (2013 년 3 월 5 일 접속).

[25] 국제앰네스티, *USA: Another brick from the wall. Connecticut abolishes death penalty, and North Carolina judge issues landmark race ruling, as momentum against capital punishment continues* (Index: AMR 51/028/2012), 2012 년 4 월 27 일,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MR51/028/2012/en (3 월 8 일 접속).

[26] 국제앰네스티, *USA: Senseless killing after senseless killing: Texas inmate with mental disability claim facing execution for murder committed as teenager*, 2012 년 7 월 7 일, http://www.amnesty.org/fr/library/info/AMR51/042/2012/en (2012 년 3 월 8 일 접속).

[27] 국제앰네스티, *USA: Another brick from the wall. Connecticut abolishes death penalty, and North Carolina judge issues landmark race ruling, as momentum against capital punishment continues* (Index: AMR 51/028/2012), 2012 년 4 월 27 일,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MR51/028/2012/en; *USA: Judge finds racism in three more death penalty cases: Death sentences overturned under North Carolina's Racial Justice Act*, 2012 년 12 월 20 일,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MR51/100/2012/en (2012 년 3 월 8 일 접속).

[28] 뉴저지주(2007 년), 뉴멕시코주(2009 년), 일리노이주(2010 년) 는 사형을 폐지했다. 뉴욕 주는 2004 년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봤으며, 뉴욕 주의회는 2007 년 마지막 사형수에 대해 감형 조치가 내려진 이후 새로운 사형 관련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29] 미 국립연구회의, "Deterrence and the Death Penalty", p. 2.

[30] 미주인권위원회, "The death penalty in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From restrictions to abolition", OEA/Ser.L/V/II. Doc. 68, 2011 년 12 월 31 일.

[31] 베트남은 유럽연합(EU)이 사형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독극물 주사 절차에 사용되는 물질을 구할 수 없었다.

[32] "9 death penalties wrongly imposed: Ex-judges to President", *Times of India*, 2012 년 8 월 19 일,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2-08-19/india/33272716_1_sc-judge-death-penalty-sc-and-hcs (2012 년 3 월 8 일 접속).

[33] *Sangeet & ANR. v. 하리아나 주*, Criminal Appeal Nos. 490-491 of 2011.

[34]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제 40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몰디브에 대한 최종견해, 105th session, 2012년 7월 9일-27일, UN document CCPR/C/MDV/CO/1, 2012년 8월 31일.

[35] "NGO requests higher judiciary to probe Balochistan juvenile death sentences", *The Tribune*, 2012 년 10 월 10 일, http://tribune.com.pk/story/449708/ngo-requests-higher-judiciary-to-probe-balochistan-juvenile-death-sentences/ (2013 년 3 월 8 일 접속).

[36] 이 법안의 제출 신청은 2013 년 철회되었다.

[37] 2012 년 3 월 27 일,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세계 연간 통계를 발표하면서, 2011 년 싱가포르에서는 확인된 사형집행 보고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싱가포르 정부가 2011 년 4 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36/006/2012/en (accessed 7 March 2012).

[38] 약물오남용법(수정안), 2012, 제 33B 절, 제 3 절 제 b 항.

[39] "Death penalty for rapists a must Minister", *The Nation*, 2012 년 7 월 15 일, http://www.nation.lk/edition/news-online/item/8326-death-penalty-for-rapists-a-must-minister.html (accessed 8 March 2012).

[40] "No promises over death penalty: MOFA", *Taipei Times*, ,2012 년 11 월 23 일, http://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12/12/23/2003550794 (accessed 8 March 2012).

[41]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자국 내 집행을 이행하고 사법활동을 지휘 및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42] ODIHR, *The Death Penalty in the OSCE Area: Background Paper 2012*, p. 11, http://www.osce.org/odihr/94219 (2013 년 1 월 29 일 접속).

[43] 개인청원 No. 2120/2011, *Vladislav Kovalev et al. v. Belarus*,2012 년 10 월 29 일 채택된 의견, UN document CCPR/C/106/D/2120/2011, 2012 년 11 월 27 일.

[44]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 사무총장 보고서, UN document A/67/226, 2012 년 8 월 2 일, 제 7 항, 제 12 항.

[45] 고문반대위원회, 러시아에 대한 최종견해, 49th session, 2012 년 10 월 29 일-11 월 23 일, UN Document CCPR/C/RUS/CO/5, 2012 년 12 월 11 일, 제 26 항.

[46] 1857 결의안 (2012), 벨라루스의 상황, 2012 년 1 월 25 일 채택; 1896 결의안(2012),러시아의 의무 존중과 이행, 2012 년 10 월 2 일 채택.

[47] *Al Nashiri v. Poland* (Fourth Section, 사건번호 no. 28761/11, 2011 년 5 월 6 일); *Al Nashiri v. Romania* (Third Section, 사건번호 no. 33234/12, 2012 년 6 월 1 일);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학자회는 2012 년 11 월 5 일 제 3 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http://icj.wpengine.netdna-cdn.com/wp-content/uploads/2012/11/ICJAI-AmicusBrief-AlNashiri_v_-Poland.pdf (2013 년 1 월 30 일 접속).

[48] *Rrapo v. Albania* (사건번호 no. 58555/10, 2012 년 9 월 25 일 판결).

[49] 2011 년 3 월 경찰관 1 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1 년 9 월 유죄 판결을 받은 다섯 번째 시위자 알리 유세프 압둘와합 알 타윌에 대한 사형선고는 2013 년 1 월 23 일 확정됐다.

[50] 2013 년 1 월, 파기법원이 검찰청장과 모하메드 호스니 무바라크, 하비브 엘 아들리가 각기 판결의 다른 부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재심 가능성이 열렸다. 재심을 통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51] 무프티는 2013 년 1 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승인했다.

[52] 2013 년 1 월 16 일 교수형에 처해진 21 세 알리 나데리는 여성 1 명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알려졌을 당시 17 세였다.

[53] Harm Reduction International, "Partners in Crime: International funding for drug control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2012, http://www.ihra.net/files/2012/06/20/Partners_in_Crime_web1.pdf (2013 년 1 월 28 일).

[54] 2013 년 1 월 9 일 대법원은 이 5 건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55] 9 월, 이란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특별보고관은 '네티즌'이 사형의 위험에 처한 19 건의 사례를 보고했다.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 UN document A/67/369, 2012 년 9 월 13 일.

[56] http://livewire.amnesty.org/2012/06/15/Iran-saudi-arabia-and-the-unfair-trials-for-drugs-offenders/, 2012 년 6 월 15 일 (2013 년 1 월 29 일 접속)

[57] "배교" 혐의는 2013 년 기각되어, 바다위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58] 2013 년 1 월 9 일, 스리랑카 출신 가사노동자 리지나 나픽은 2005 년 돌보던 아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처형됐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17 세였다.

[59] 이 수치는 무력분쟁 당시 무장 반정부단체와 정부군이 자행한 불법살해와 즉결처형에 대한 기록은 포함하지 않는다.

[60] 두바이에만 자국 내 상급 법원이 존재한다.

[61] 두바이 항소법원은 2013 년 1 월 징역 5 년형으로 감형시켰다.

[62] 자유권위원회, 예멘에 대한 최종견해, 104th session, 2012 년 3 월 12 일 – 30 일, UN document CCPR/C/YEM/CO/5, 2012 년 4 월 23 일, 제 13 항 및 제 14 항.

[63] 자유권위원회, 케냐에 대한 최종견해, 105th session, 2012 년 7 월 9 일 – 27 일, UN document CCPR/C/KEN/CO/3, 2012 년 8 월 31 일, 제 10 항.

[64] 이 수치에는 말리 북부에서 이슬람주의 무장단체가 저지른 투석형에 의한 "처형" 등의 공개적인 불법살해에 대한 기록은 포함하지 않는다.

[65] *Godwin Pius, Ojo Adeyeye, Nnenna Obi (suing for themselves and on behalf of all prisoners sentenced to death and presently on the death row in Nigerian prisons) v. Governor of Abia State & 36 others*, 사건번호 no. FHC/L/CS/573/2010.

[66] LEDAP, *평가 보고서,나이지리아의 사형제도 & 범죄 관리에 대한 여론조사*, 2012.

[67] 알샤밥과 같은 소말리아 무장 반정부단체가 간첩 활동, 또는 자신들의 이슬람 율법 해석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공개적인 민간인 불법살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10 월 "간통" 혐의로 여성 1 명을 투석형에 처한 것도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68] 자릴라 카미스 코코는 2013 년 1 월 20 일 열린 공판 이후 구금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구금 6 월로 감형시켰는데, 그녀는 사전 구금 기간을 통해 형을 마쳤다.

[69] 법률인권센터와 잔지바르 법률센터, 2011 *탄자니아 인권보고서*, 2012, http://www.humanrights.or.tz/wp-content/uploads/2010/09/TANZANIA-HUMAN-RIGHTS-REPORT-2011.pdf (2013 년 2 월 14 일 접속).

[70] 법률인권센터와 잔지바르 법률센터, *2011 탄자니아 인권보고서*, p. 17.

[71] 개인청원 No. 1859/2009, *Kamoyo v. Zambia*, 2012 년 3 월 23 일 채택된 견해, UN document CCPR/C/104/D/1859/2009, 2012 년 4 월 26 일.

[72] "No takers for hangman's job", *Newsday*, 2012 년 8 월 9 일, http://www.newsday.co.zw/2012/08/09/2012-08-09-no-takers-for-hangmans-job/ (2013 년 2 월 13 일 접속).

[73] 2012 년 4 월 10 일, 아프리카위원회 제 50 회 정기총회에서 채택 (2011 년 10 월 24 일-2011 년 11 월 7 일, http://www.achpr.org/files/news/2012/04/d46/study_question_deathpenalty_africa_2012_eng.pdf (2012 년 1 월 22 일 접속).

[74] 러시아는 1996 년 8 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1996 년과 1999 년 사이 체첸공화국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PEOPLE POWER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싸우고 있고,
81개가 넘는 국가에서 아직도 고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4개가 넘는 국가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관습, 문화, 종교에 의해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0년간,
이처럼 절망적이지만 숨겨져 온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한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암담한 현실의 변화를 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3가지

JOIN US!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으로 가입해
전 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인권지킴이가 되어주세요.

ACT NOW!

전 세계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다양한 인권캠페인 및 탄원활동으로 행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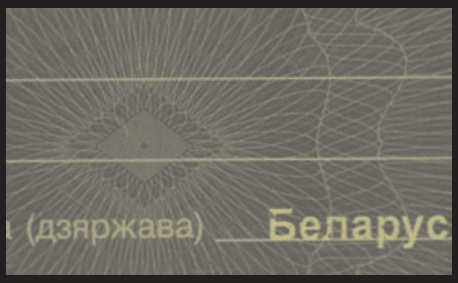
DONATE!

국제앰네스티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지키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하나은행 569-910012-72204 (사)앰네스티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045호
Tel. 02-730-4755
Email. info@amnesty.or.kr
amnesty.or.kr



2012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12년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에 있어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전 세계 사형폐지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은 2012년 미주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1년 13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한 것과 달리 2012년에는 9개 주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었다. 코네티컷 주(州)가 미국에서 17번째로 사형을 폐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등 후퇴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았고, 싱가폴은 사형법 개정을 고려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준수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사형폐지 움직임에 큰 진척을 보였다. 가나 정부는 새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할 예정이다. 시에라리온에는 사형수가 없다.

벨라루스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다. 라트비아는 1월 사형폐지법이 시행됐고, 이로써 전 세계에서 97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12월 유엔총회는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네 번째 결의안을 111개 회원국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취합한 2012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건수를 담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전세계적 사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과 정황, 가해자의 특성과 유뮤죄,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사형에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0-620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amnesty.or.kr

문서번호: ACT 50/001/2013
2013년 4월

AMNESTY
INTERNATIONAL